

전경련 2016 전망세미나  
2016. 6. 16

# 최근의 경제현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

김준경  
KDI 원장



**1.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**

**2.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이슈**

**3. 2016년도 경제전망**

**4.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**



## 1. 글로벌 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흐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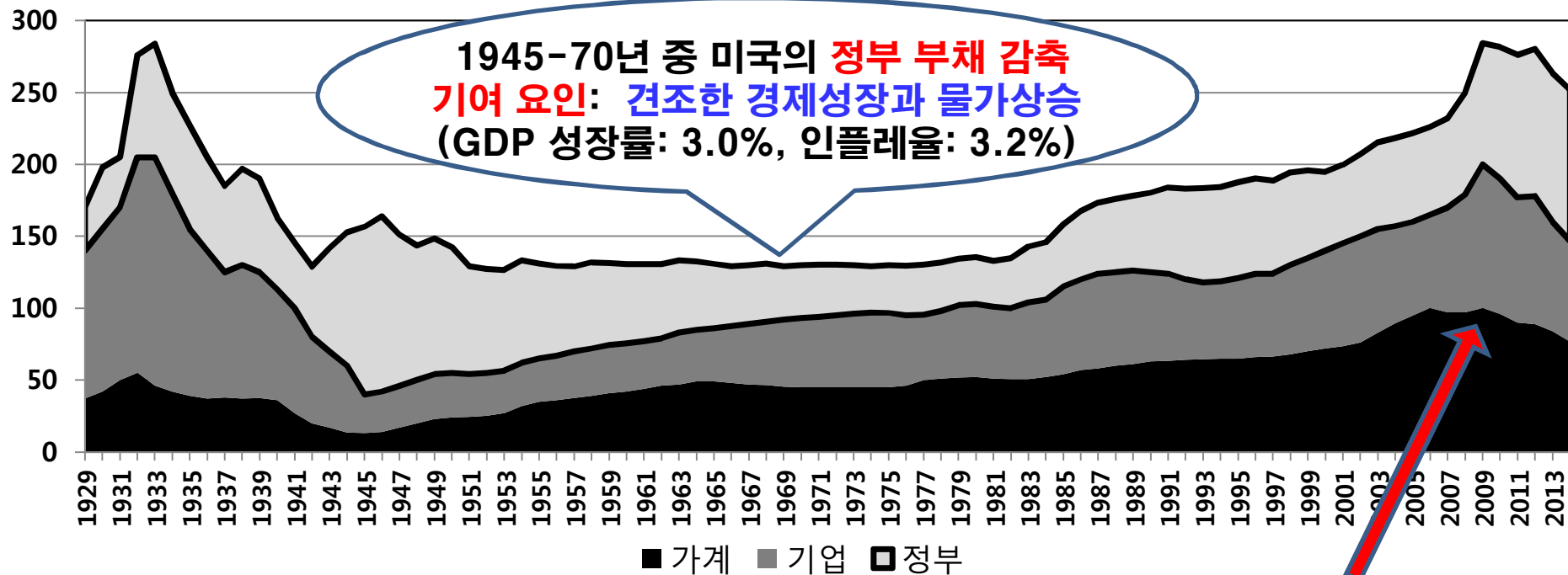
# □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징과 전개상황 (1/3)

1

▶ 미국 (세계 최대 소비국)의 가계부문의 부채비율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위기 발생. 위기 이후 **총부채의 감축은 부진**

- **위기 이후 가계 부채는 축소** (2009년 GDP 대비 100% → 2014년 77%).  
반면, **정부 부채는 급증** (2007년 GDP 대비 62% → 2014년 105%)

미국의 (가계 + 기업 + 정부 부채)/GDP (%): 1929-2014



※ **부문별 성장 제약 임계치 부채수준 (Cecchetti 외 (BIS, 2011)) :**  
GDP 대비 가계 부채 **85%**, 기업 부채 **90%**, 정부 부채 **85%**

## □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징과 전개상황 (2/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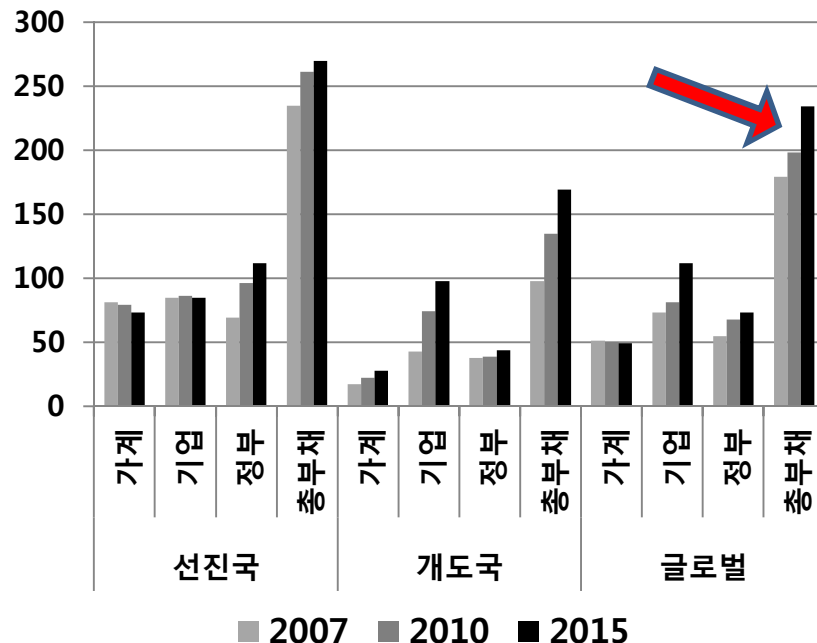
2

위기 이후 전 세계의 부채규모는 低금리의 영향 등으로 오히려 **증가**: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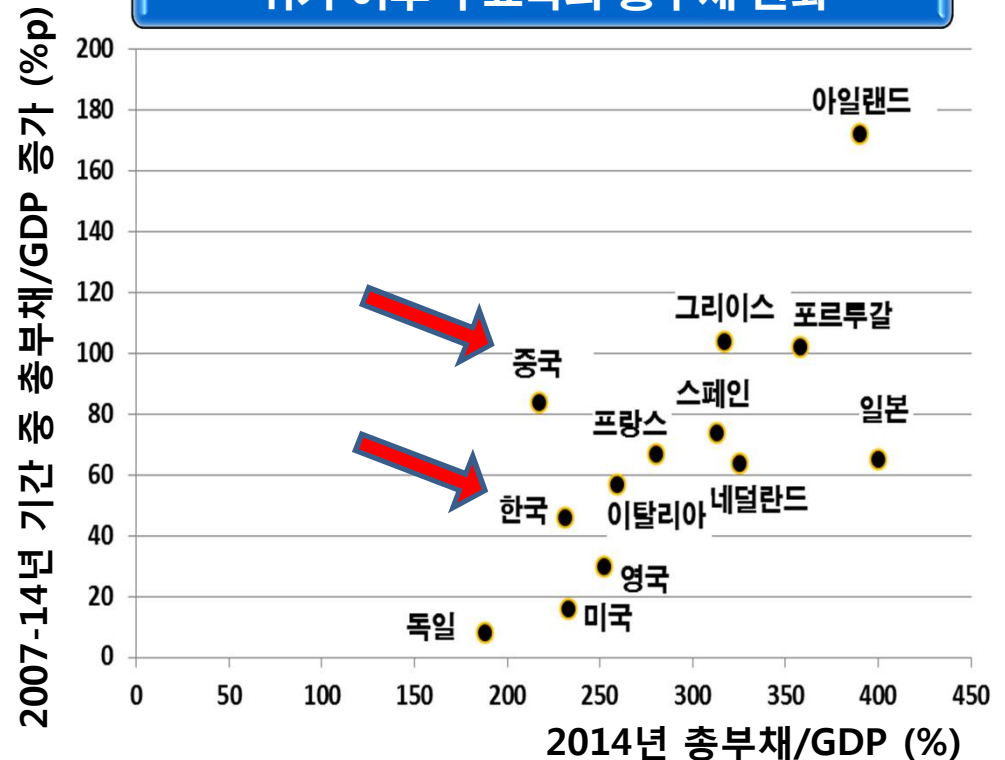
※ 2007년말: GDP 대비 179% ⇒ 2015년말 GDP 대비 234% (Borio, BIS, 2016)

- 위기 이후, 선진국은 **정부 부채** 급증: 세수 감소 및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에 기인
- 위기 이후, 신흥국은 기업부문 부채를 중심으로 **민간 부채** 급증: 중국은 기업부문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. 한국은 가계 및 공기업부문에서 부채가 크게 증가

위기 이후 부문별 부채 추이 (GDP 대비, %)



위기 이후 주요국의 총부채 변화



# □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특징과 전개상황 (3/3)

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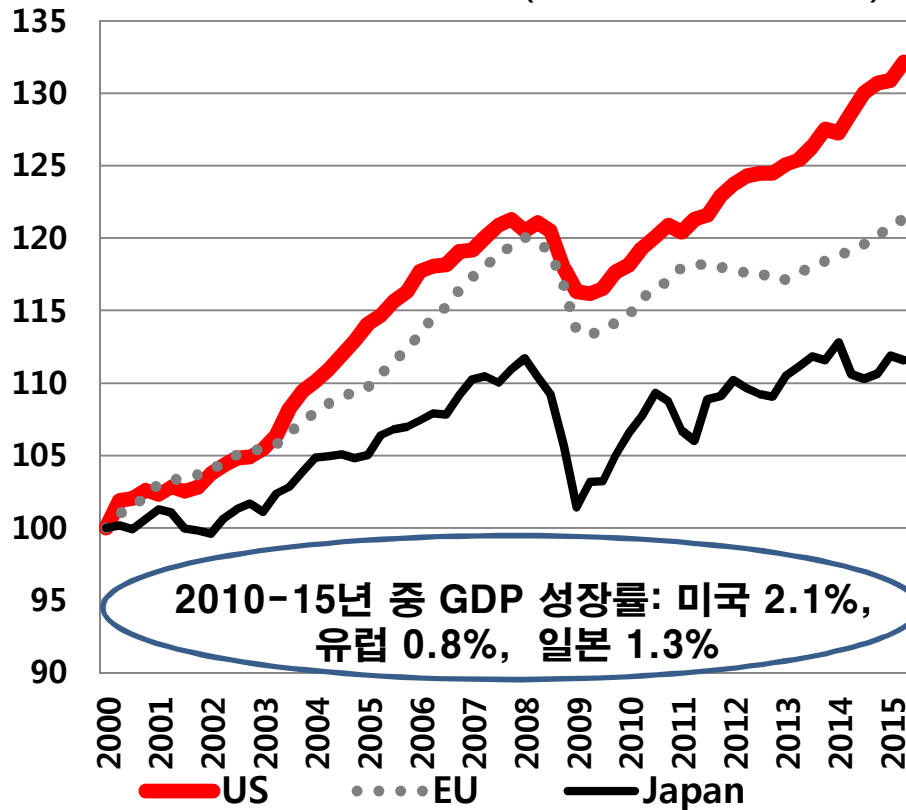


위기 이후 **미국** 경제는 서서히 **회복**된 반면, **유럽과 일본**은 GDP 수준이 아직도 8년 전 **위기 직전 수준**에 머물고 있음.

글로벌 위기 이후 **미국과 유럽**은 **매우 낮은 인플레이율**을 보이고 있으며 **일본**은 **0% 인플레이율**을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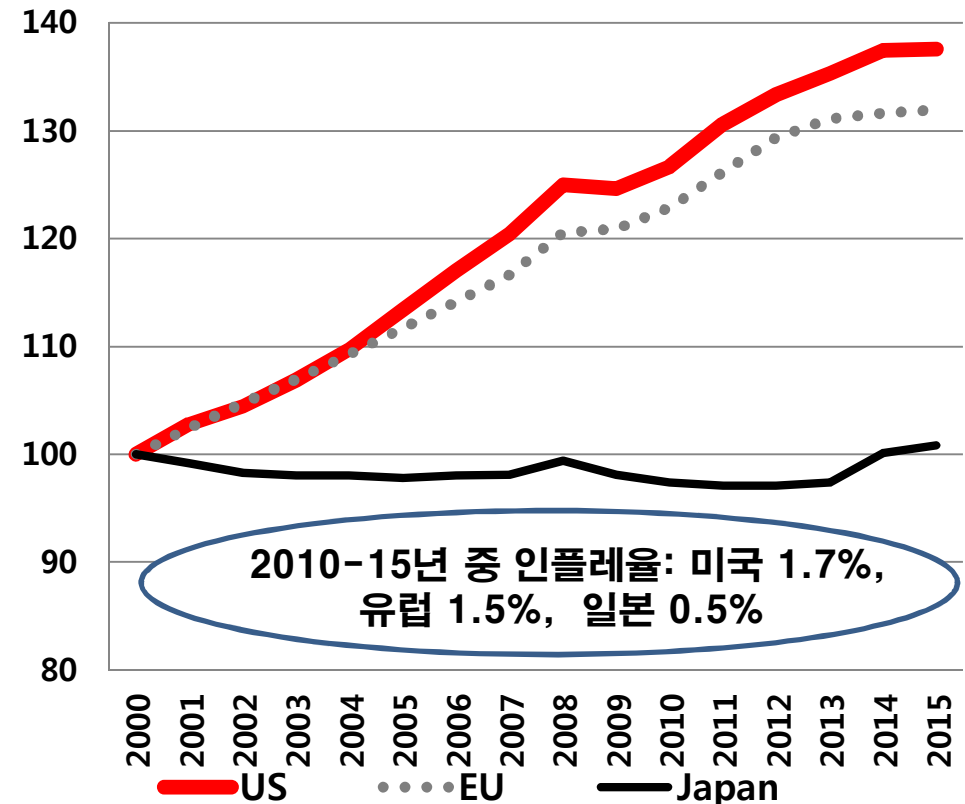
GDP 수준

(2000년 1분기 GDP =100)



소비자물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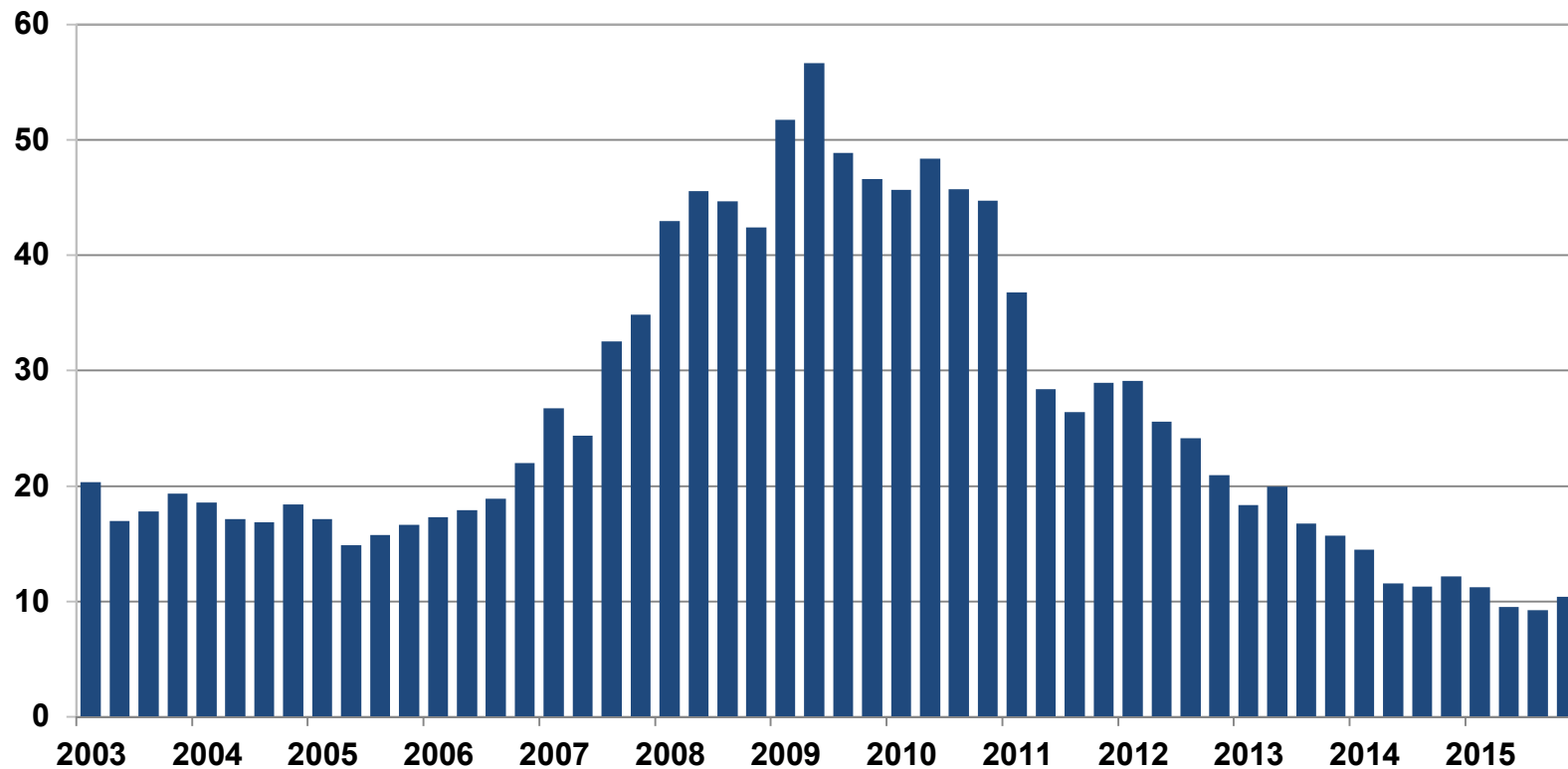
(2000년 소비자물가 =100)



**Adaptability:** 유연한 노동시장, 再起의 기회, 높은 시민의식

신규 주택압류 (Foreclosure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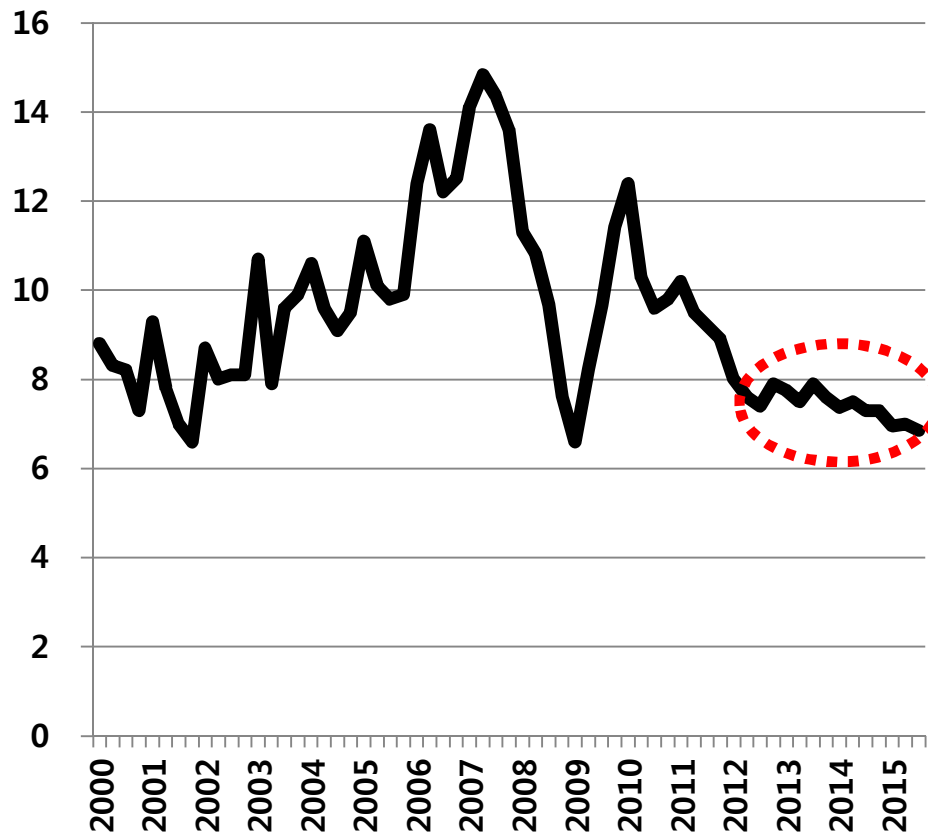
(만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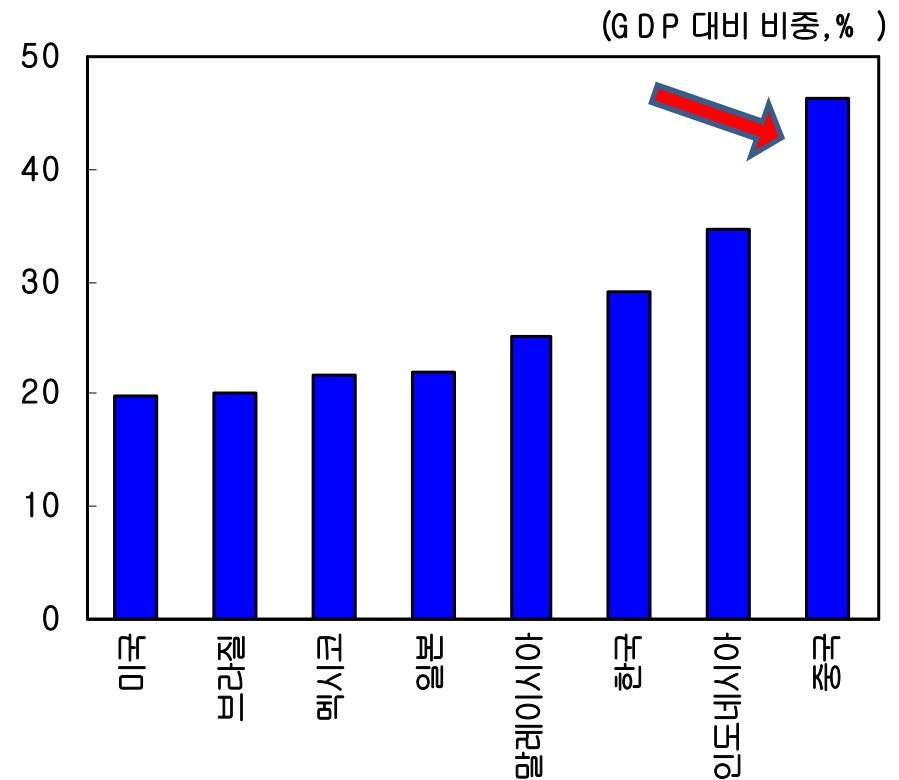
## □ 중국: 성장률 둔화와 과잉투자

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증가율 둔화 및 무리한 **경기부양의 후유증(과잉투자)**으로 성장률 하락

중국의 GDP 증가율 (%)



투자율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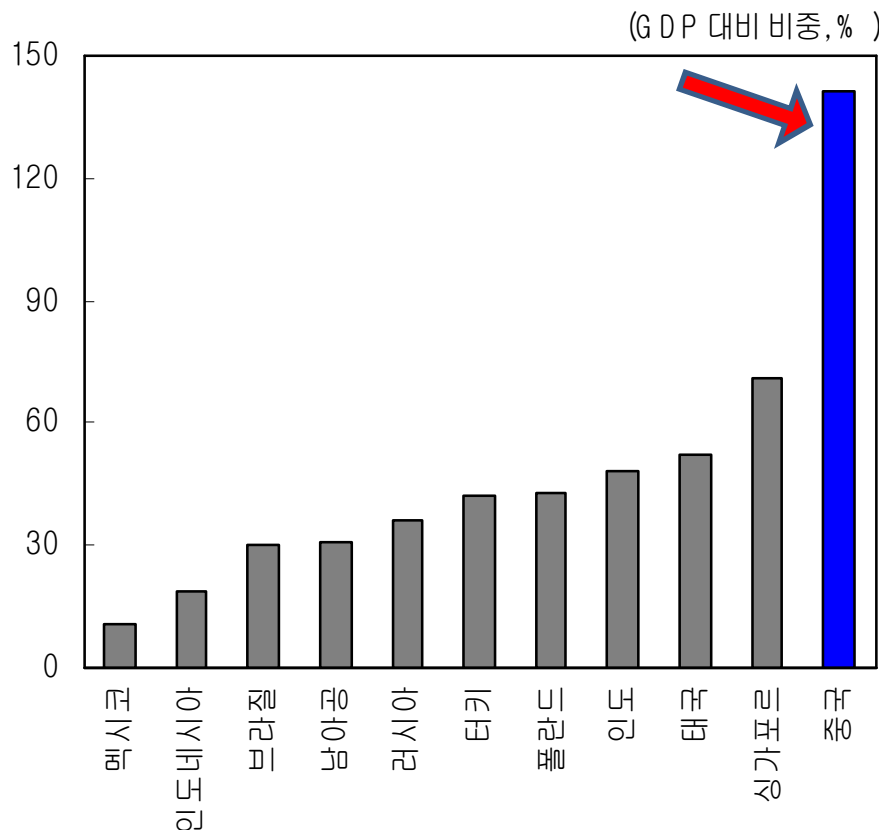


# 〈참고〉 중국경제의 불안요인: 기업부실과 부동산가격 버블 (1/2) <sup>6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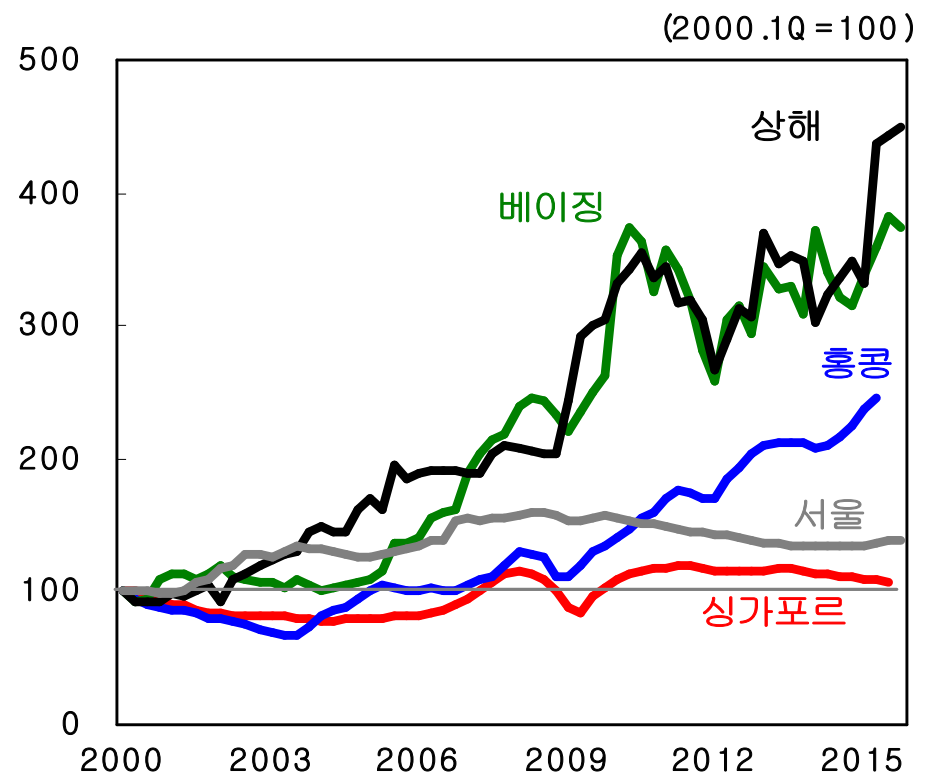
기업부채가 과다한 가운데, 주요 산업의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 
부실기업 증가

- 급팽창한 부채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시장 과열과도 연계된 것으로 평가됨

기업 부채/GDP 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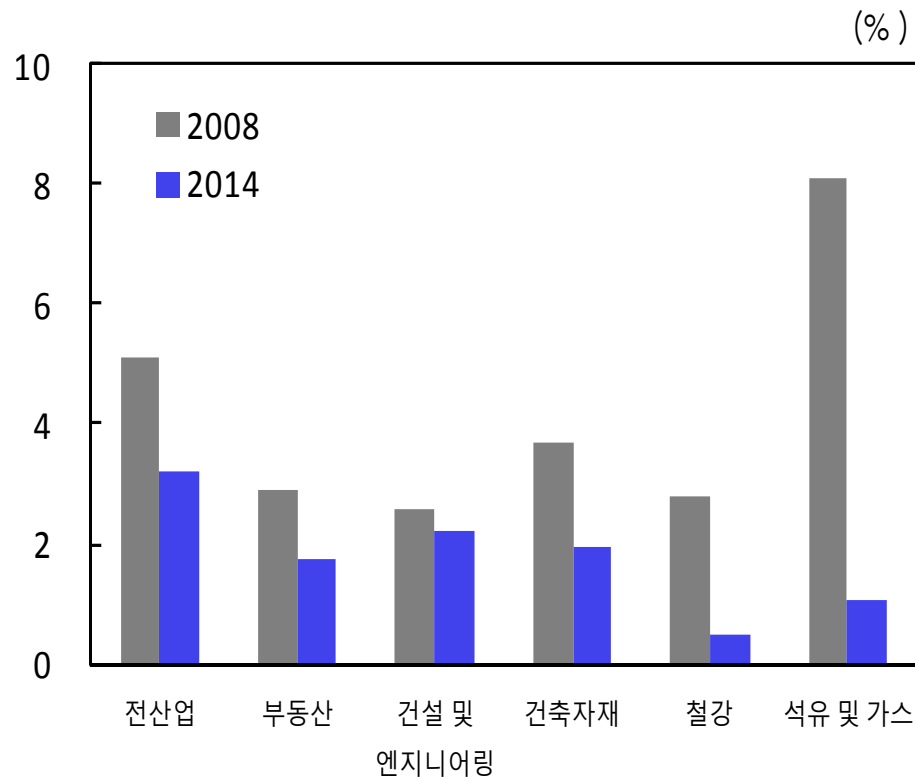
주요 도시 주택가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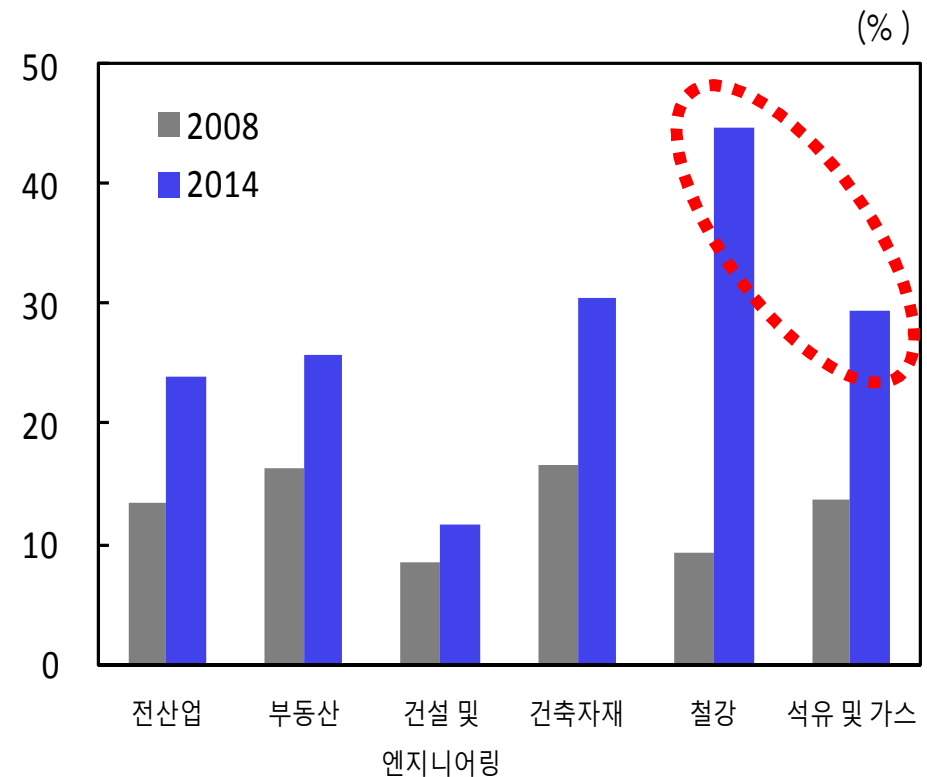
## 〈참고〉 중국경제의 불안요인: 기업부실과 부동산가격 버블 (2/2) <sup>7</sup>

- 과잉투자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저하 및 부실은 **철강, 석유화학** 등에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주요 산업별 총자산 순이익률



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체수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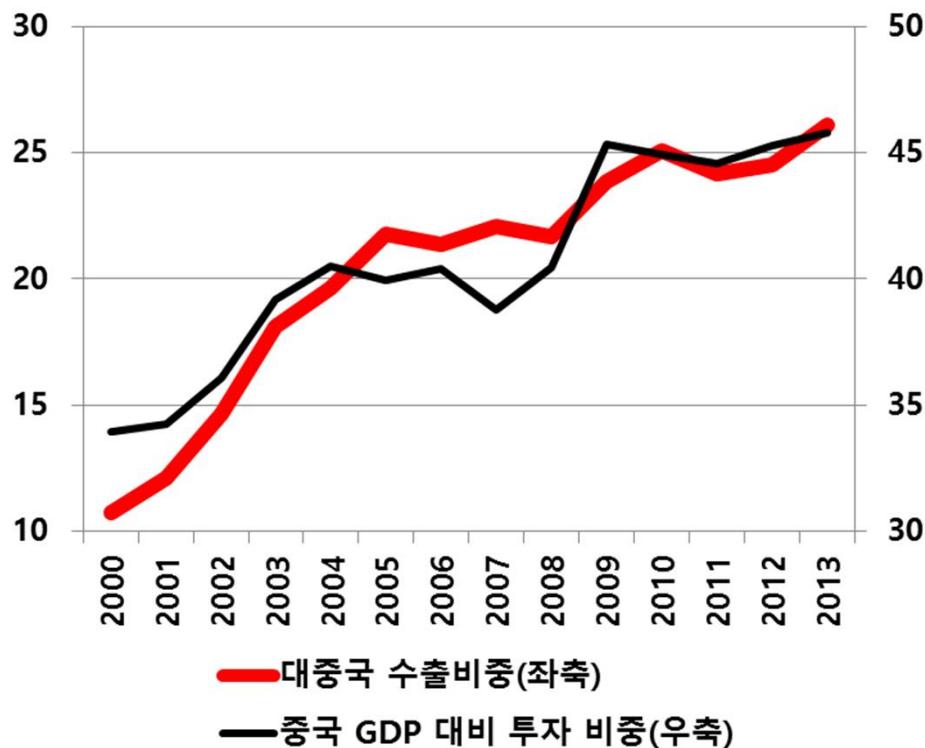


# 〈참고〉 중국의 투자조정과 한국의 對 중국 수출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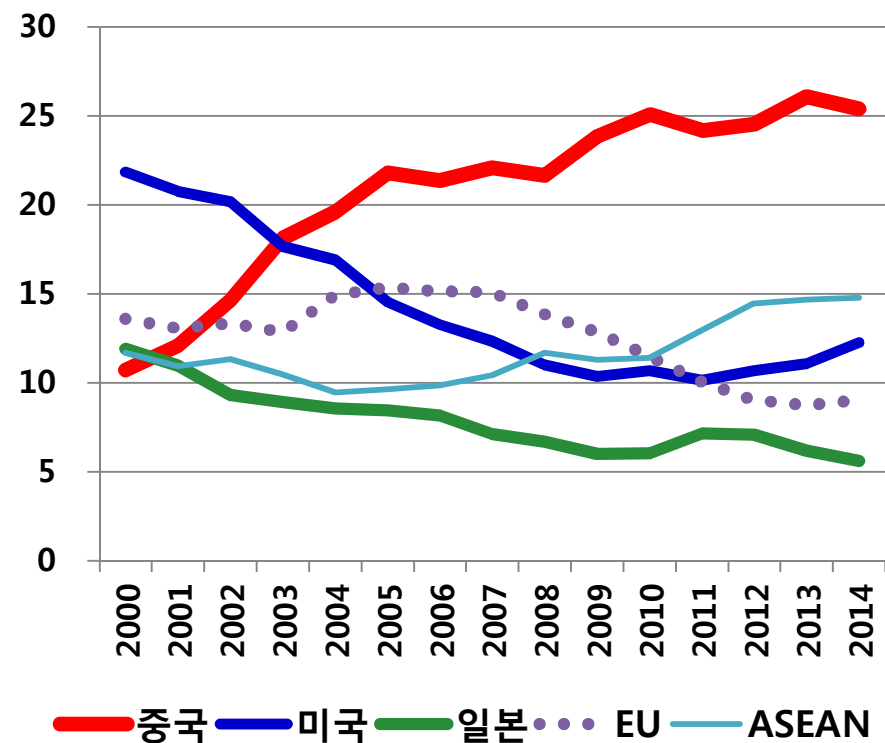
## 한국의 對 중국 수출과 중국의 국내 투자는 밀접한 관계

-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대상국. 한국의 對 중국 수출의 **70%**는 **부품 등 중간재**가 차지.
- 따라서 중국의 향후 국내 투자 조정은 한국 수출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
한국의 대 중국 수출비중과 중국의 투자비중(%)



한국의 국가별 수출비중 (%)



# 〈참고〉 일본의 1990년대 재정건전도 악화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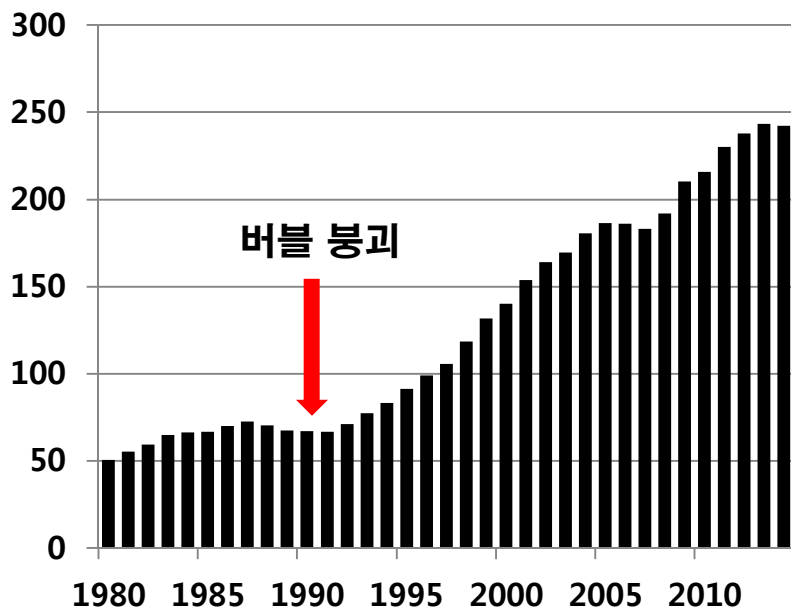
버블 붕괴 이후 방만한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으로 정부부채 확대

- 도로 · 항만 · 공항 등 이미 기반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한 부문에 투자 집중

## 버블 붕괴 이후 재정지출 확대 정책 (조엔)

|    | 92. 8 | 93. 4 | 93. 9 | 94.2 | 95.9 | 98.4 | 98.11 | 99.11 | 00.10 |
|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내각 | 미야자와  | 미야자와  | 호소카와  | 호소카와 | 무라야마 | 하시모토 | 오부치   | 오부치   | 모리    |
| 규모 | 10.7  | 13.2  | 8.0   | 15.3 | 14.2 | 16.7 | 17.0  | 17.9  | 11.0  |

## 일본의 정부부채/GDP (%)



## 재정지출 부문별 한계 자본생산성과 투자 비중

Y축 : 부문별 한계 자본생산성 (1991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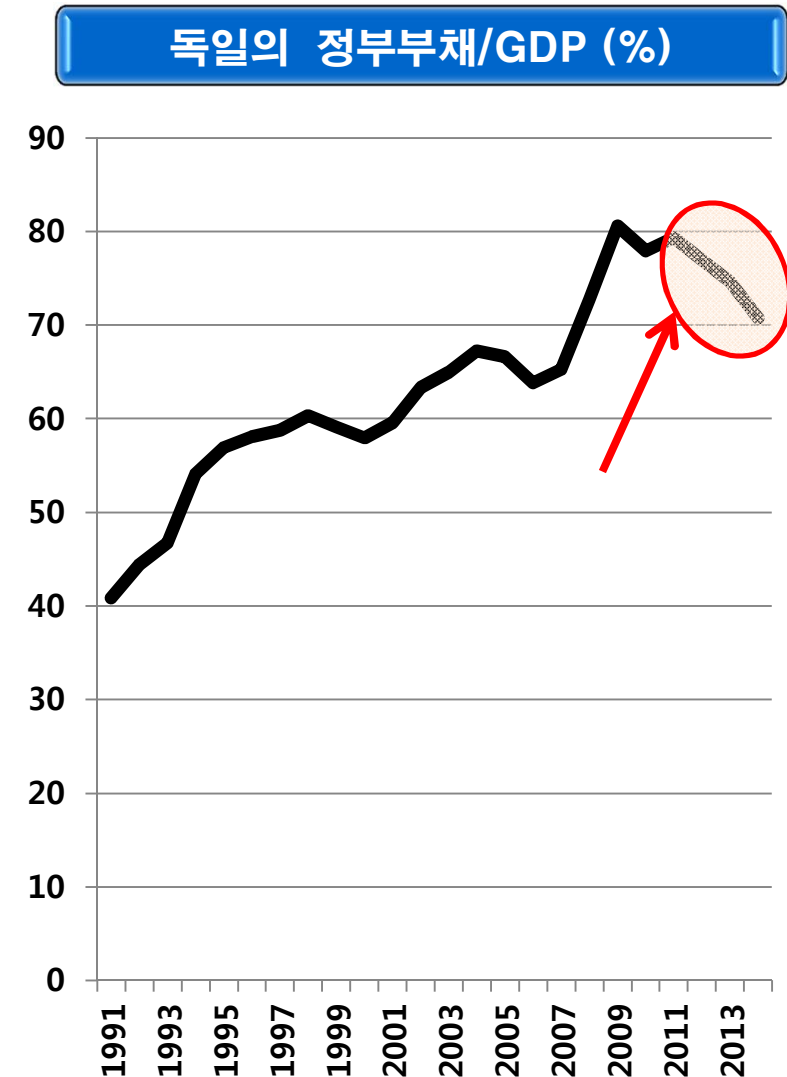


X축 : 부문별 공공투자 비중 (1992-2003년)

# 〈참고〉 독일: Debt Brake Rule과 정부 부채 증가 억제

## ▶ 2009년부터 정부 부채 억제 장치 (Debt Brake Rule)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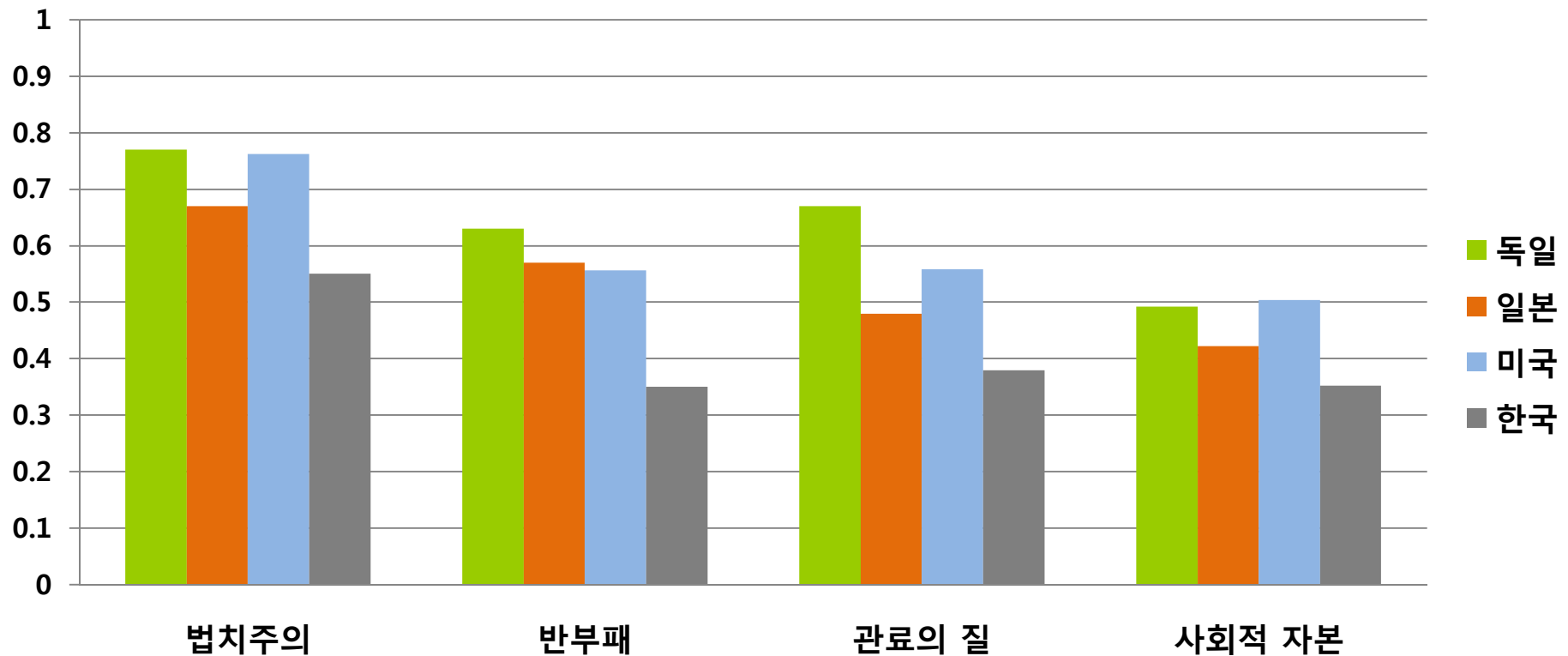
- 경기부양을 위한 융자성 지출의 상환의무 유보 등 **예외조항 허용**으로 인하여 2001-10년 기간 중 GDP 대비 정부 부채가 **58%** → **80%** 상승
- 2007년 헌법재판소는 경제성장을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**예외조항**이 3년 연속 시행된 중앙정부의 예산에 대해 **違憲** 판결
- 2007년부터 2년 동안 **16명의 하원의원**과 각 **주정부 prime minister**들이 토의하여 debt brake rule을 제정
- 연방정부는 2016년부터 순차입이 GDP의 0.35%를 넘지 않는 것을 목표로 2011년부터 차입을 줄이는 노력 경주. 채무가 과다한 주정부도 연방 정부의 지원 하에 구조적 적자를 줄여감. ⇒ 2014년에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**70%까지 하락**.



## 〈참고〉 독일과 일본의 국가 지배구조 (거버넌스) 수준 차이<sup>11</sup>

독일은 일본에 비하여 법치주의, 반부패, 관료의 질, 사회적 자본 측면에서 우위에 있음.

국가 지배구조 (거버넌스) 지수 (2012년)



자료: KDI (2014, 거버넌스 연구: 지표 개발 및 응용)



## 2. 한국 경제의 구조적 이슈

## □ 잠재성장률 하락



###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**생산성 증가세가 둔화**

- 2016년 이후의 전망은 비교적 **양호한 생산성 증가세가 유지된다는 전제에 기초**

####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 (성장 기여도)

(단위: %, %p)

|            | 실질GDP<br>(1+2+3) | 취업자 수<br>(1) | 물적자본<br>(2) | 총요소생산성<br>(3)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2001~2005년 | 4.6              | 0.9          | 2.1         | 1.5           |
| 2006~2010년 | 4.0              | 0.5          | 1.8         | 1.7           |
| 2011~2015년 | 3.1              | 1.0          | 1.3         | 0.8           |
| 2016~2020년 | 3.0              | 0.4          | 1.0         | 1.6           |
| 2021~2025년 | 2.5              | 0.1          | 1.0         | 1.4           |
| 2026~2030년 | 1.8              | -0.2         | 0.8         | 1.3           |
| 2031~2035년 | 1.4              | -0.4         | 0.5         | 1.3           |

자료: KDI (2014, 권규호 · 조동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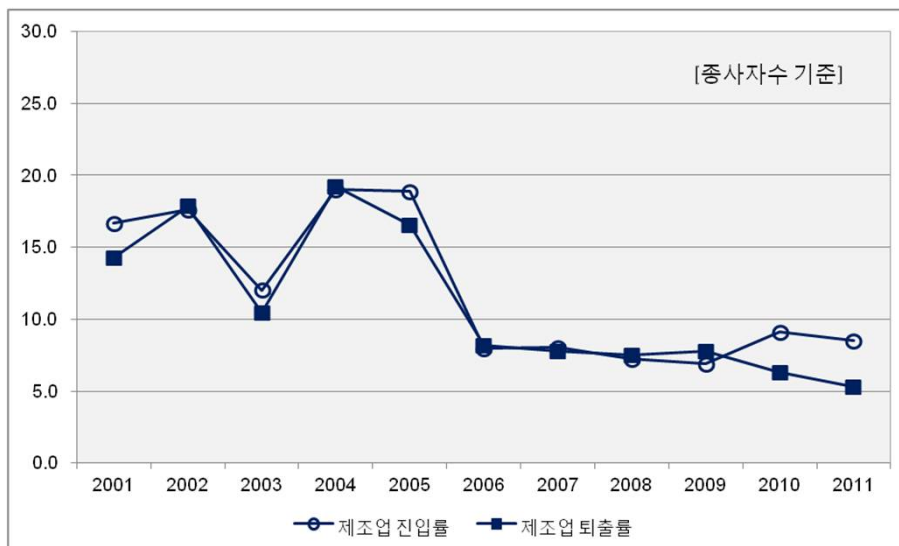


# □ 진입 및 퇴출 부진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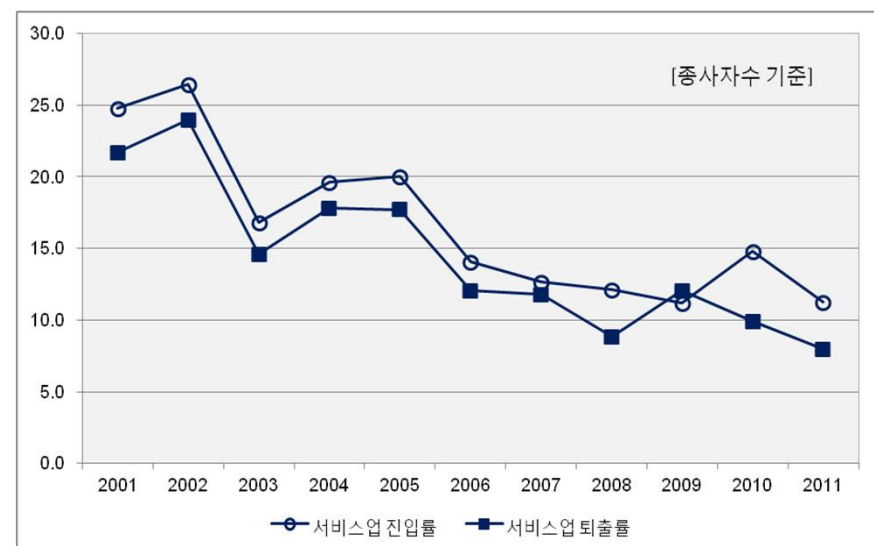
▶ 우리 경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모두 경제의 **신진대사가 저하되는 모습**

- 각종 규제와 부실 지원은 창조적 파괴와 생산요소의 효율적 재분배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
- 부실기업의 보호가 잠재적 신규기업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유념해야 함 (OECD, 2015)

제조업 (%)



서비스업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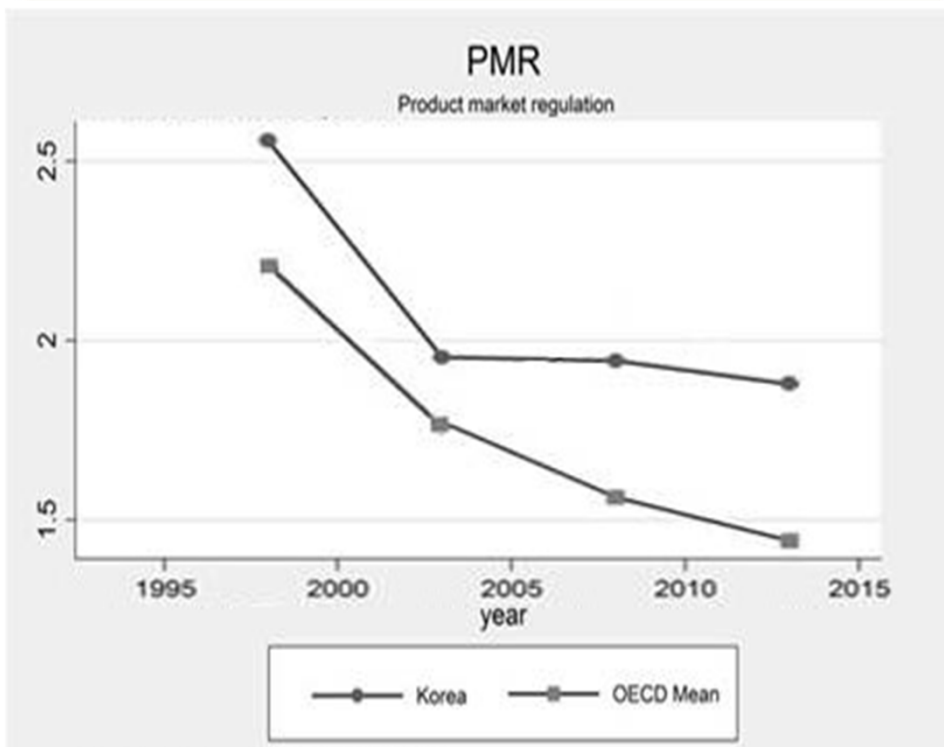


## □ 높은 규제로 인한 투자 및 고용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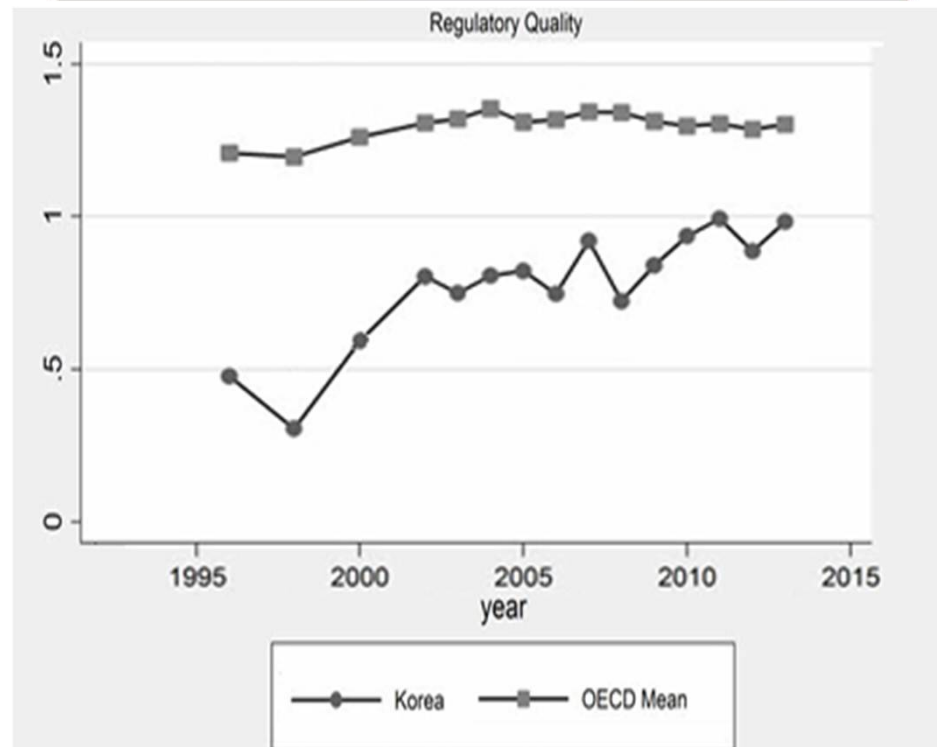
▶ 한국은 투자 여력은 있지만 **진입규제** 등 높은 규제로 인하여 투자 여건 미흡

- 상품시장 규제 10% 감축시, 선진국은 1.2%, 개도국은 1.7% GDP 증가 (OECD 2015)
- 한국의 규제의 질을 OECD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경우, 1인당 GDP 2% 내외 증가 (KDI 김정욱, 2015)

### 상품시장의 규제 (PMR): 한국 vs. OEC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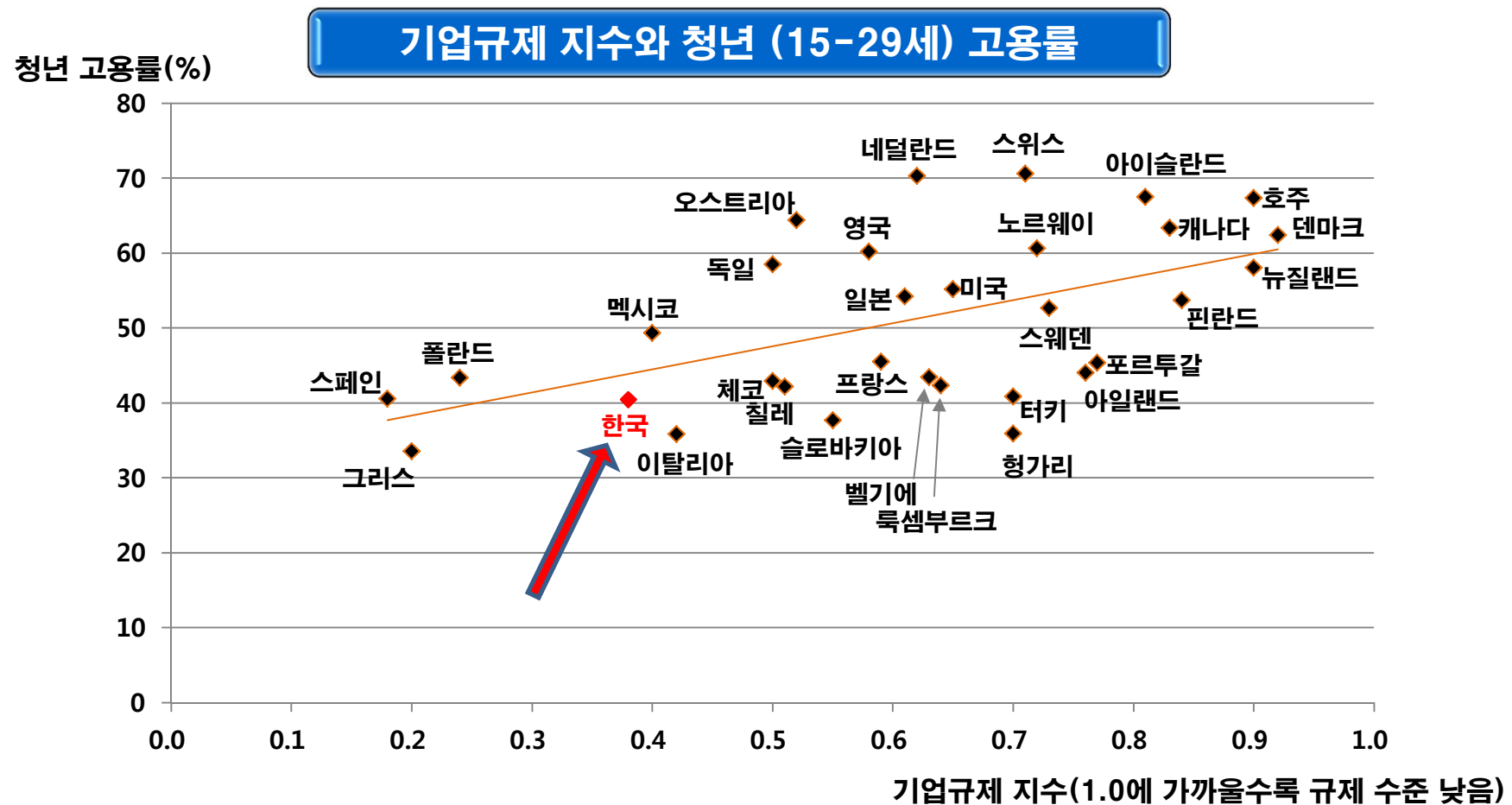


### 규제의 질: 한국 vs. OECD



# 〈참고〉 높은 규제와 부진한 청년 고용

OECD 국가군 중 한국의 **청년 고용률** 낮고 기업에 대한 규제는 높은 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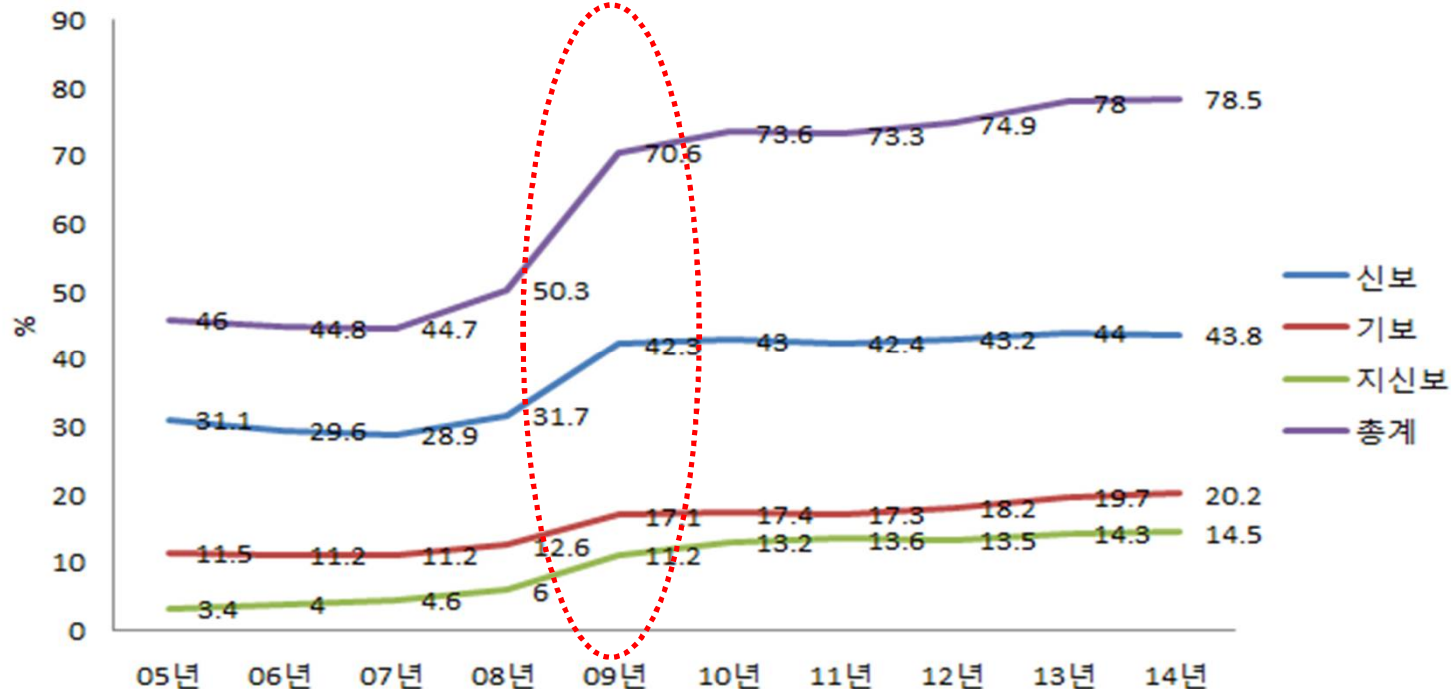


## □ 비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금융 지원 운용

중소기업 금융지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, 금융지원 수혜기업의 **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짐**이 확인됨. (KDI 장우현, 2015)

- 2009년 금융지원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수혜기업의 총요소생산성을 지원받지 않은 가상 상황 대비 4.9%p 낮추고 **잔존율**은 5.3%p 높였음 (제조업-광업 10인 이상 사업체 전수).

정책금융 지원 잔액 (조원)



자료: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2015)

# <참고> 중기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: 포장두부업 사례 <sup>17</sup>

▶ 철저한 시장 조사 및 기업 전략에 대한 이해 없이 대기업 매출액 제한 조치(2011년) 결과, 대기업 제한 = 중소기업 성장의 기대가 달성되지 않음. (KDI 이진국, 2015)

- 제한 전: 대기업은 국산콩두부, 중소기업은 수입콩두부 생산에 주력
- 제한 후, 대기업이 비싼 국산콩두부 생산을 감축, 값싼 수입콩두부 생산을 확대
- 시장결과: 대·중소기업 수익 감소, 시장규모 축소, 소비자 후생 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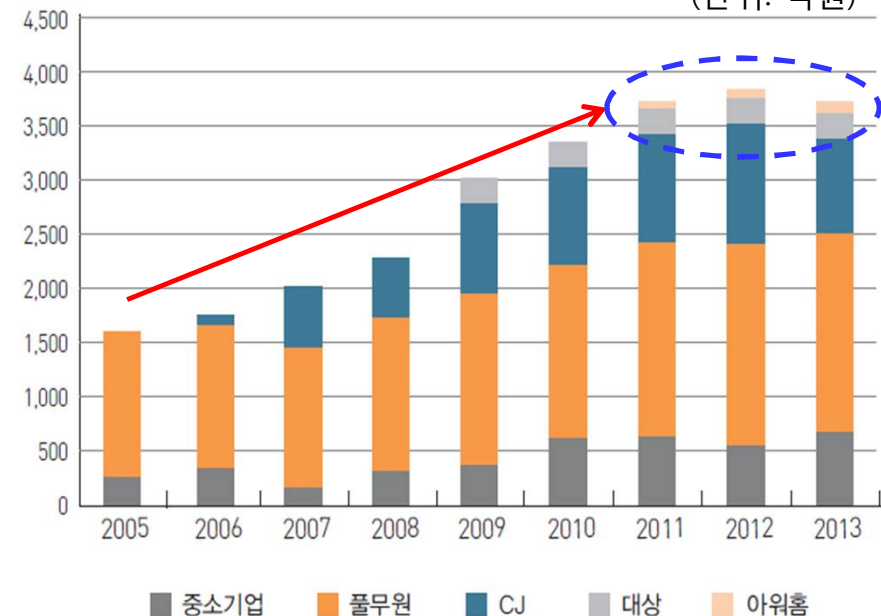
## 대·중소기업 수익 동반 감소

(단위: 백만원)

|           | 월평균<br>가변수익 | 2011  | 2014  | 변화율<br>(%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전체        | 대기업         | 5,057 | 4,070 | -19.5      |
|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| 703   | 576   | -18.1      |
| 국산콩<br>두부 | 대기업         | 3,873 | 2,884 | -25.5      |
|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| 268   | 334   | 24.9       |
| 수입콩<br>두부 | 대기업         | 1,185 | 1,186 | 0.1        |
|           | 중소기업        | 436   | 242   | -44.5      |

## 시장규모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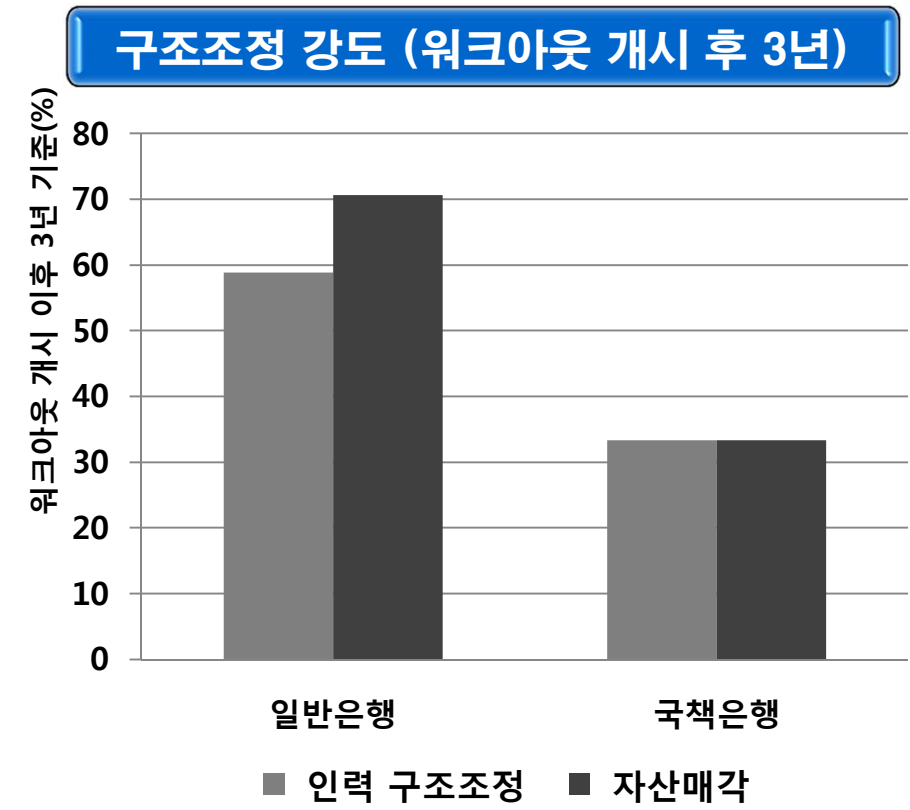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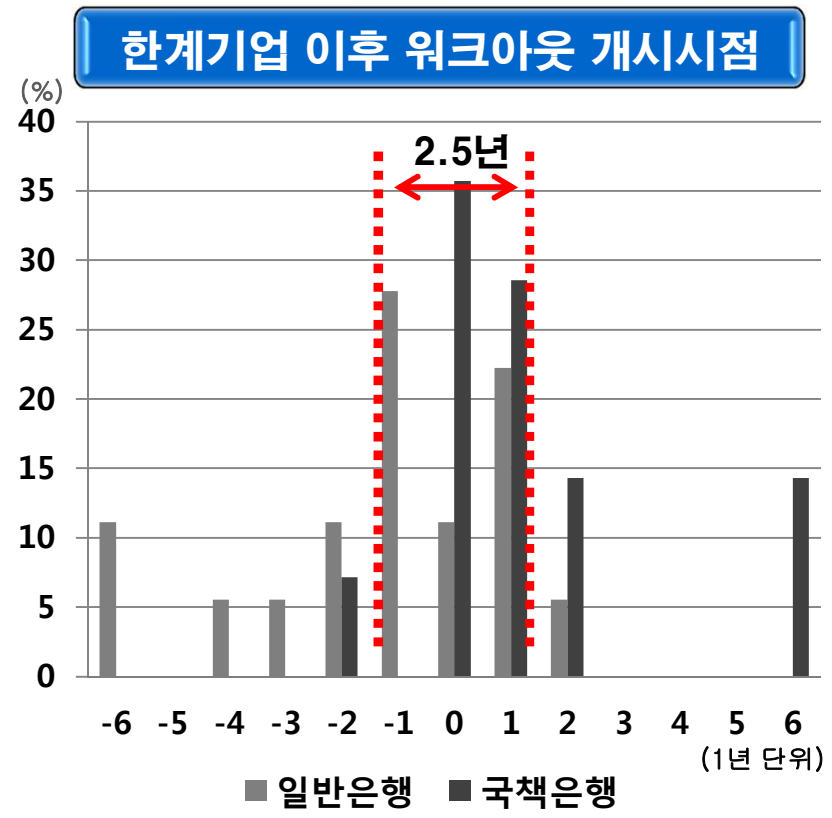
(단위: 억원)



#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지연

▶ **국책은행**은 일반은행에 비해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 개시 시점이 늦고, 구조조정 강도도 미약 (KDI 2015, 남창우/정대희)

- 워크아웃 개시시점: 한계기업(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미만) 시점 대비 일반은행은 1.2년 빠른 반면 **국책은행**은 1.3년 늦어 **일반은행에 비해 2.5년 지체**
- 국책은행은 일반은행에 비해 자산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 강도도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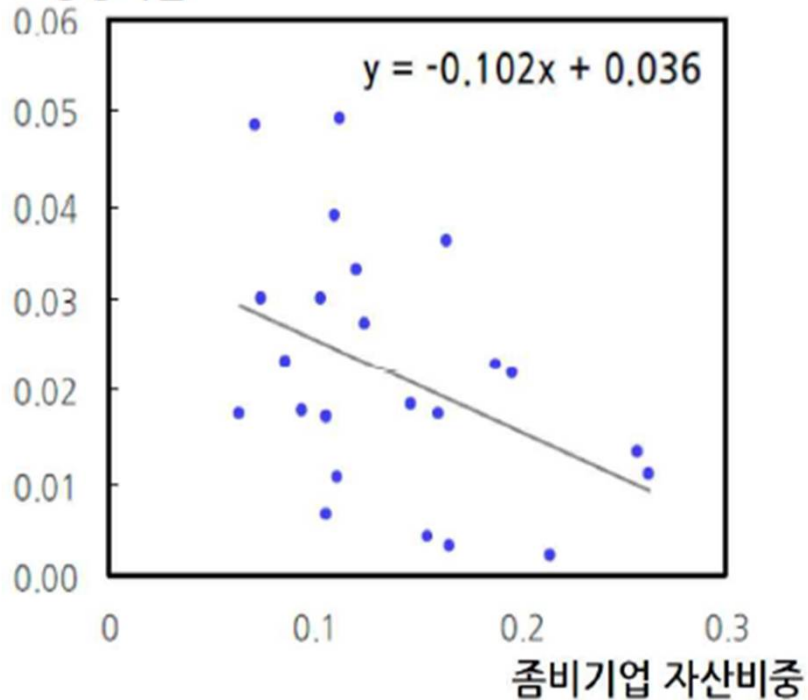


## 〈참고〉 부실기업 정리의 효과 시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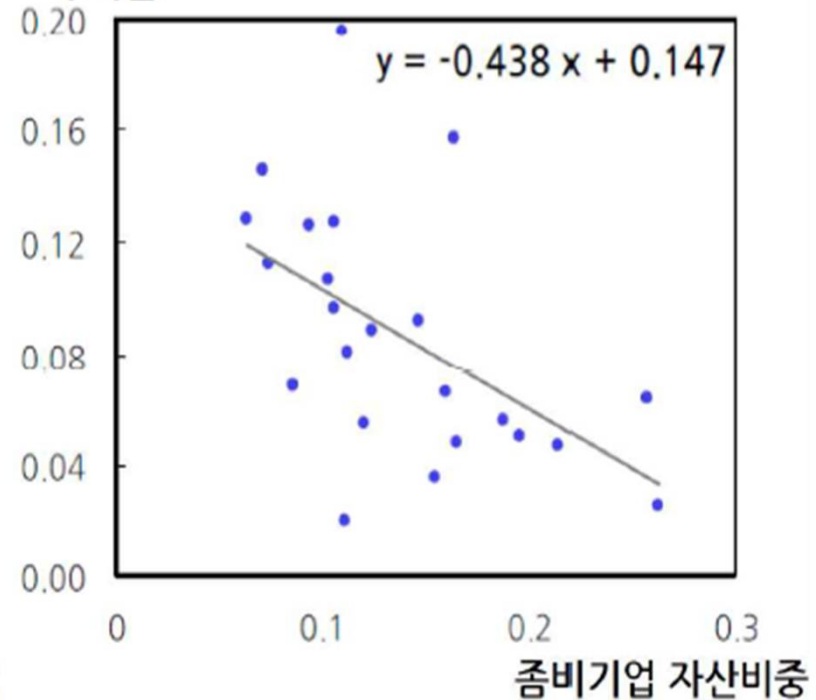
▶ **좀비기업 비중이 15.6% → 5.6%로 감소될 경우,  
고용 11만명 증가 (KDI 정대회, 2014)**

업종내 좀비기업 자산 비중과 정상기업 생산활동

고용증가율



투자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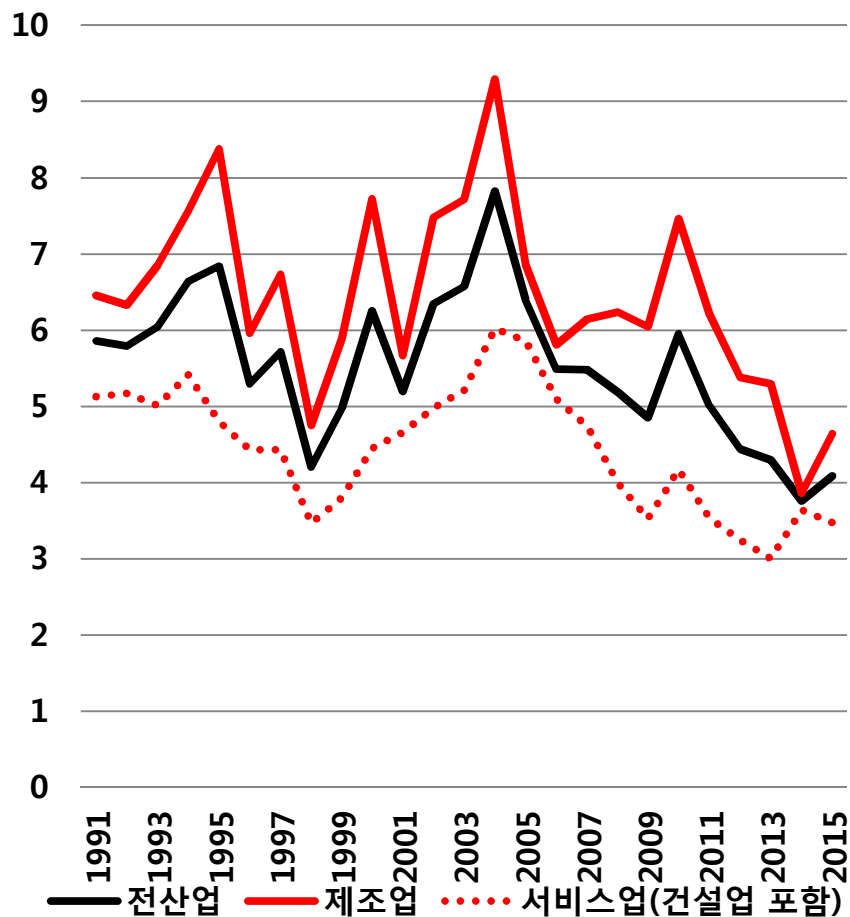


주: 2010~13년 제조업 업종별 평균 기준  
자료: 정대회(201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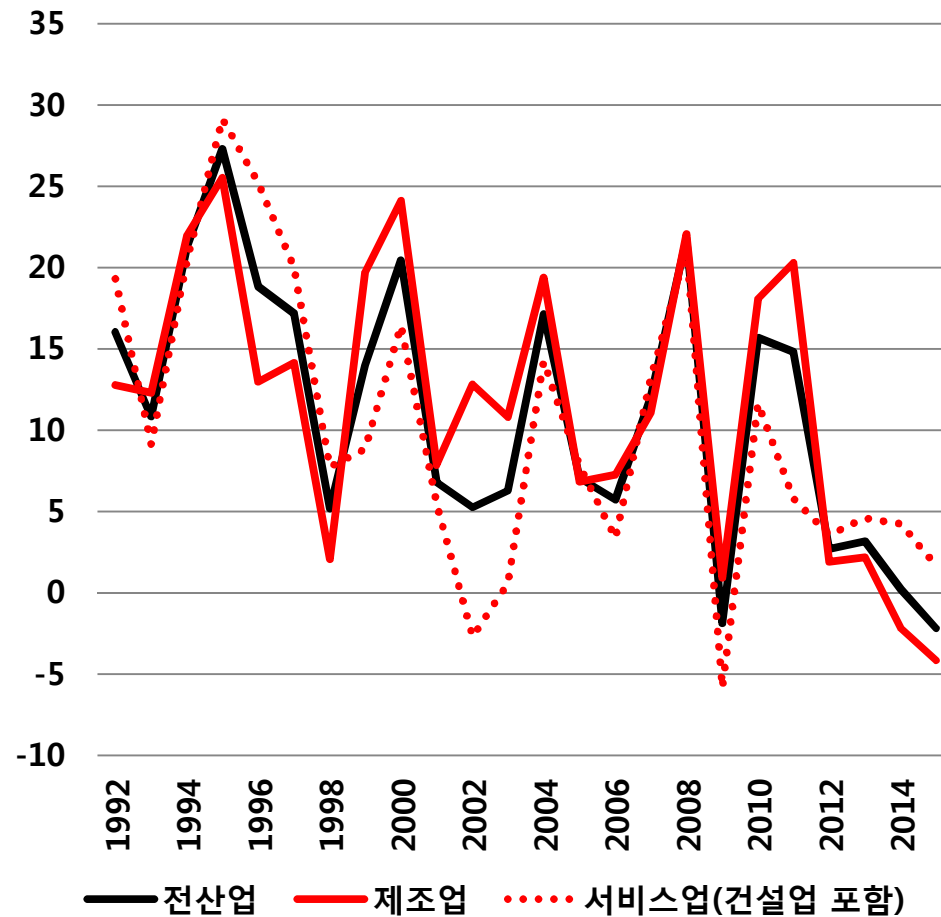
# □ 기업의 수익성 악화 (1/3)

## 기업의 수익성 및 성장성 하락 추세

외부감사대상 기업 영업 이익률



외부감사대상기업 매출액 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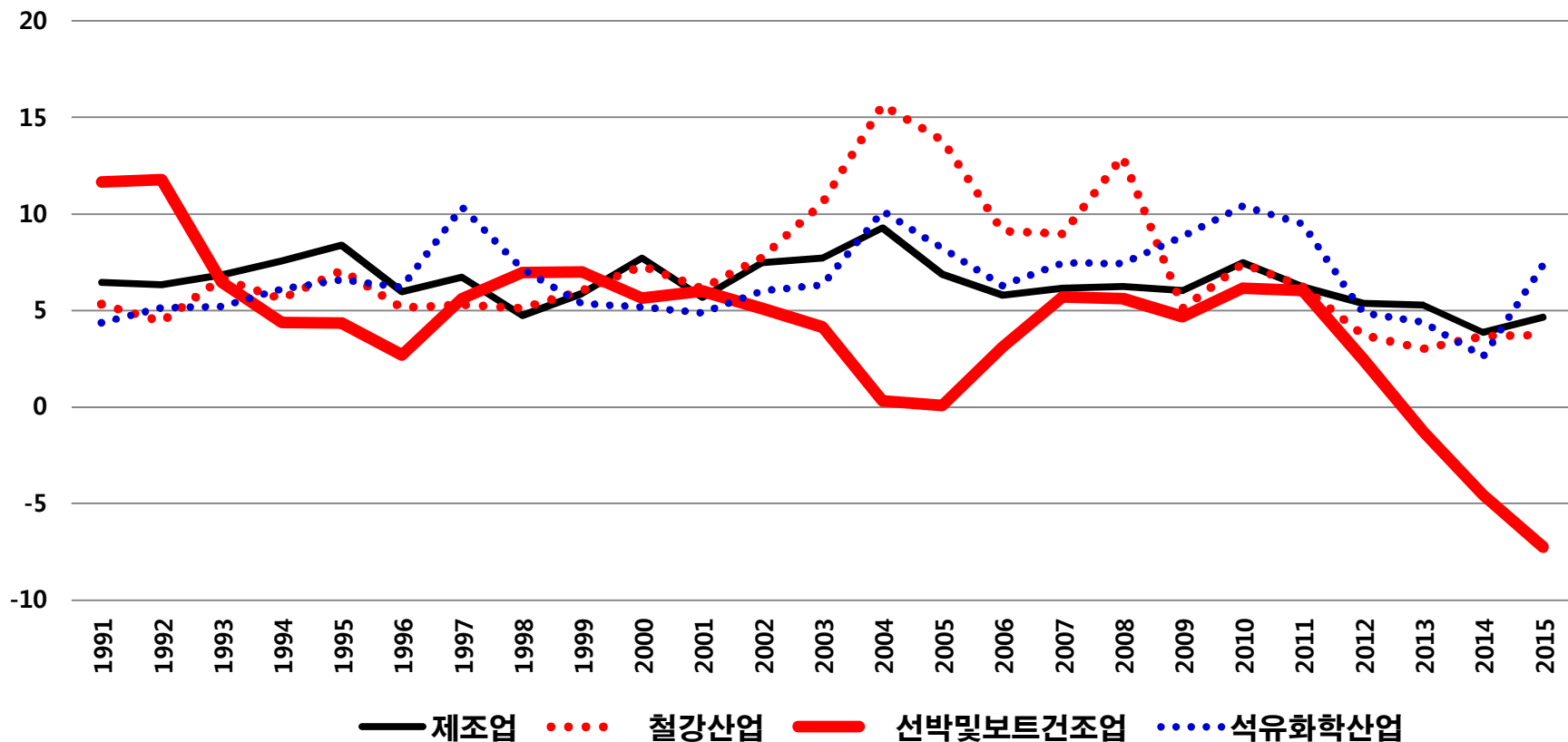


## □ 기업의 수익성 악화 (2/3)

제조업의 수익성은 **조선업** 부문에서 특히 악화

- 대형 3사의 경우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, 중소형 조선사도 부실 심화

영업이익률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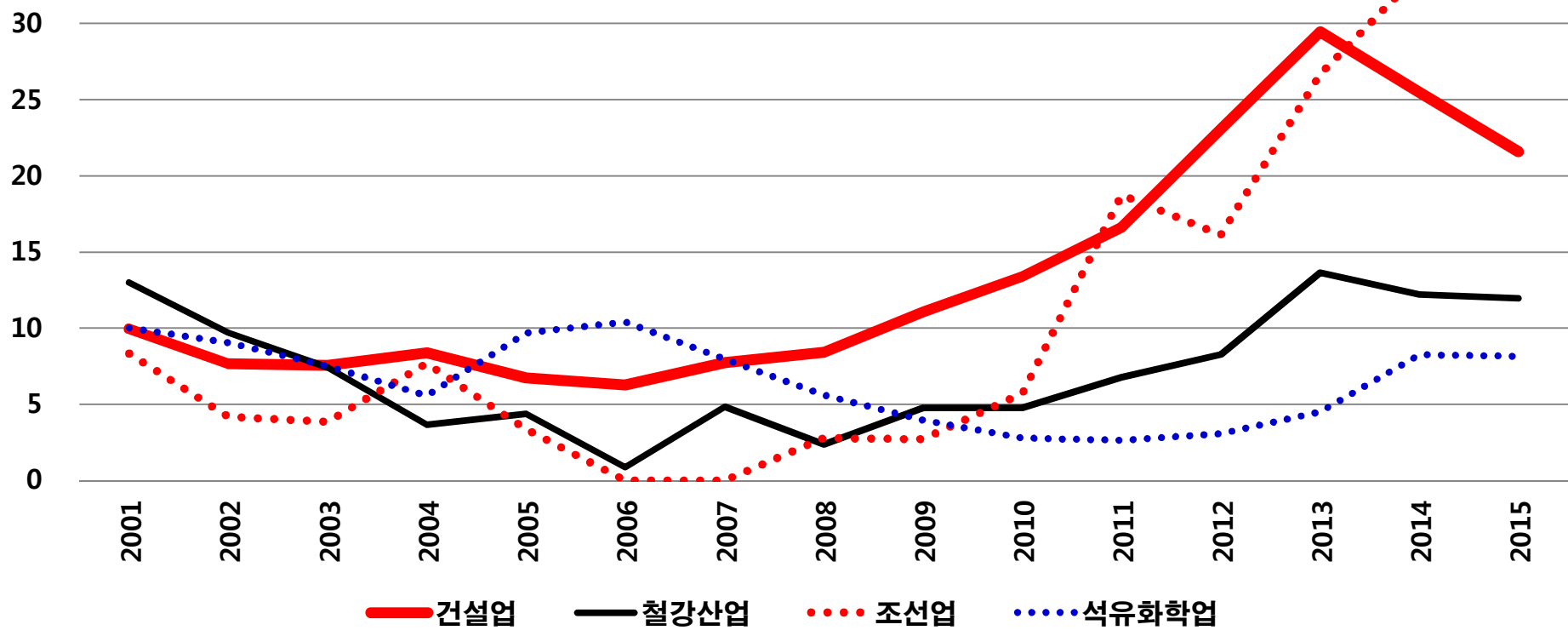


# <참고> 수익성 하락과 좀비기업

▶ 전 산업 **좀비기업**: 3년 연속 (2015, 14, 13년) 이자보상배율 1배 미만 기업체수 비중 14.5% (제조업: 9.5%, 서비스업: 18.8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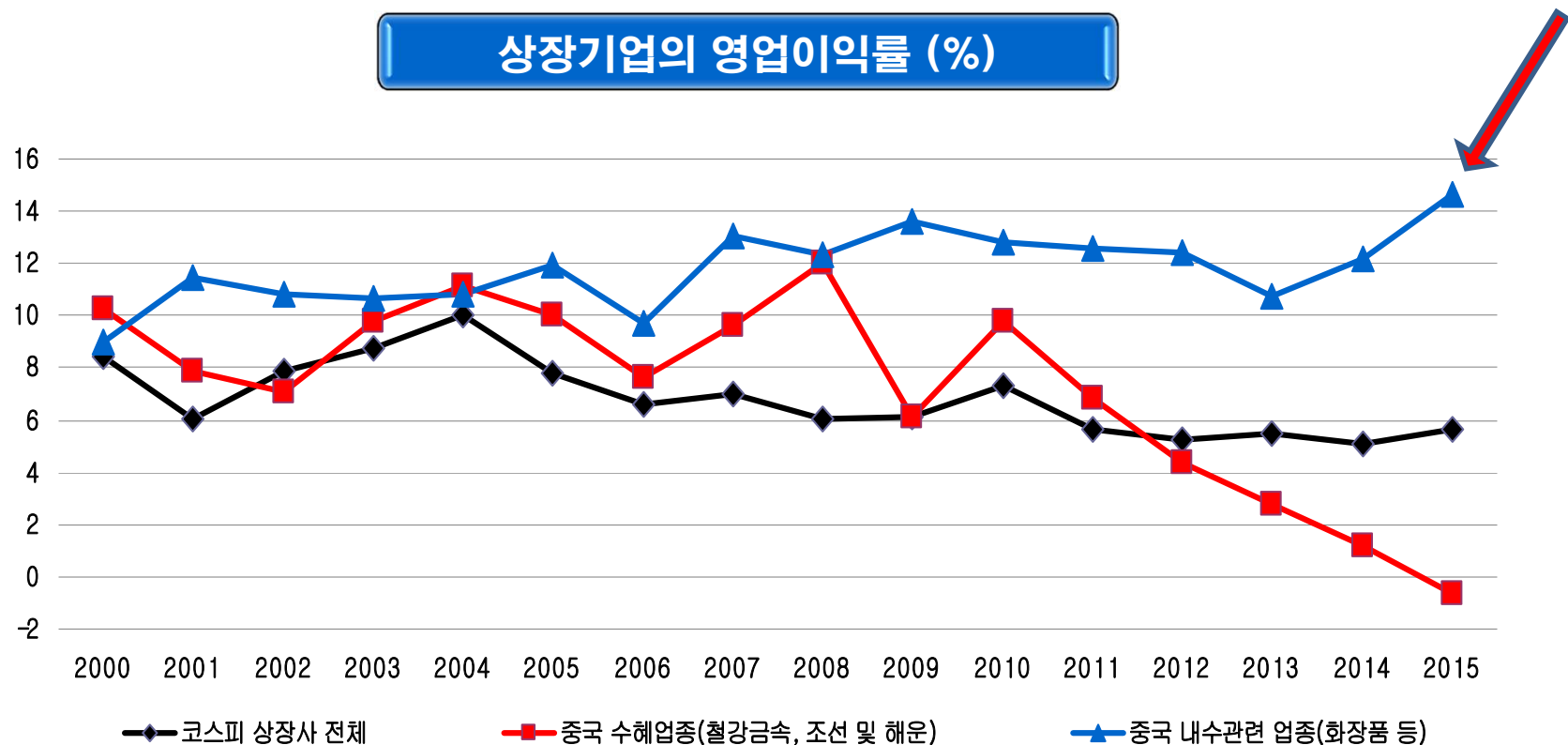
- **조선업**, 건설업, 철강산업은 **대기업**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기 이후 좀비 기업 증가세

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배 이하인 대기업 비중(%)



## □ 기업의 수익성 악화 (3/3)

우리 경제는 2010년까지 중화학공업제품의 對 중국 수출 중심으로 'China Effect'의 가장 큰 수혜국이었음. 앞으로는 중국의 **내수 중시**의 정책 전환에 따른 **소비재 시장 확대**를 겨냥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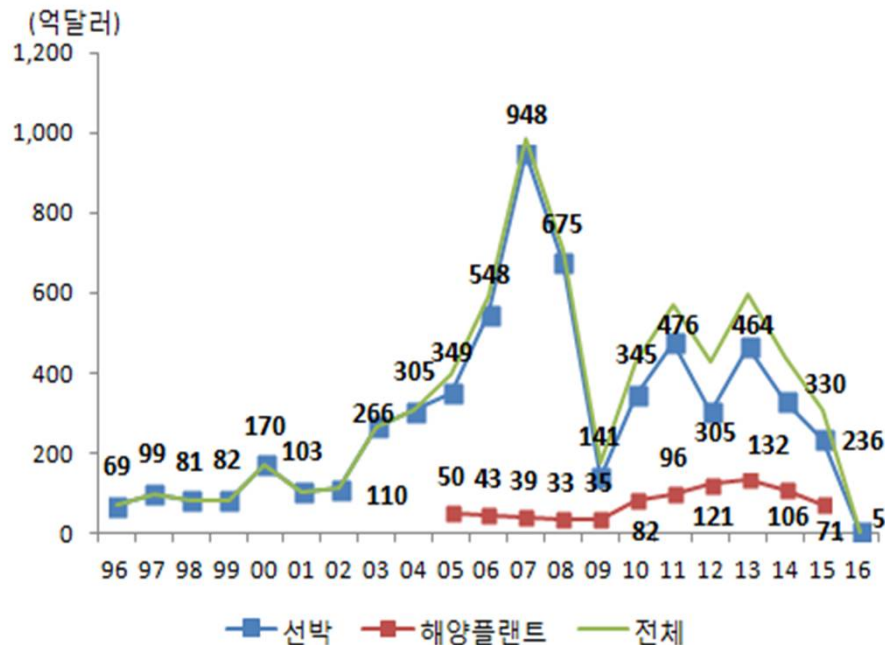


# 〈참고〉 국내 조선업 현황 (1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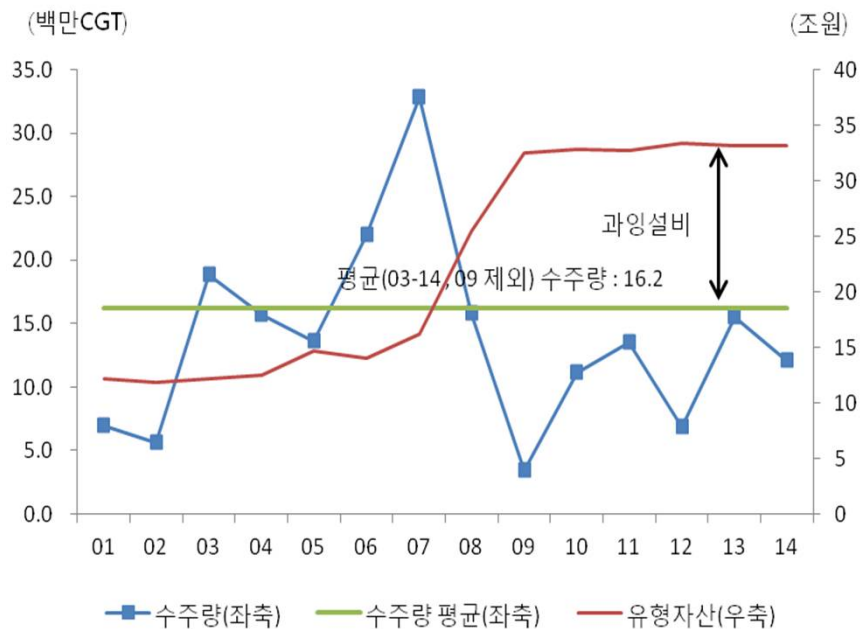
## 최근 수주 부진 및 과잉설비 등에 따라 대규모 부실 초래

- 대형 3사의 경우 큰 폭의 적자 기록: 2015년 대우조선해양은 연간 5.5조원의 적자,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도 각각 1.5조원 적자
- 한진, SPP, 성동, 대선 등은 채권단 관리 (자율협약)하에 있으며, STX는 법정관리 신청, 신아 SB는 파산절차 진행 중

한국 조선업 수주금액 추이



한국 조선업 수주금액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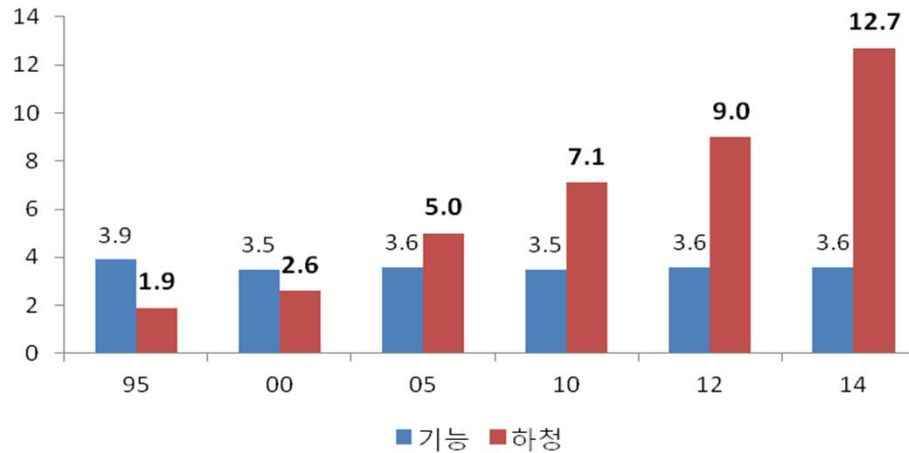


# <참고> 국내 조선업 현황 (2/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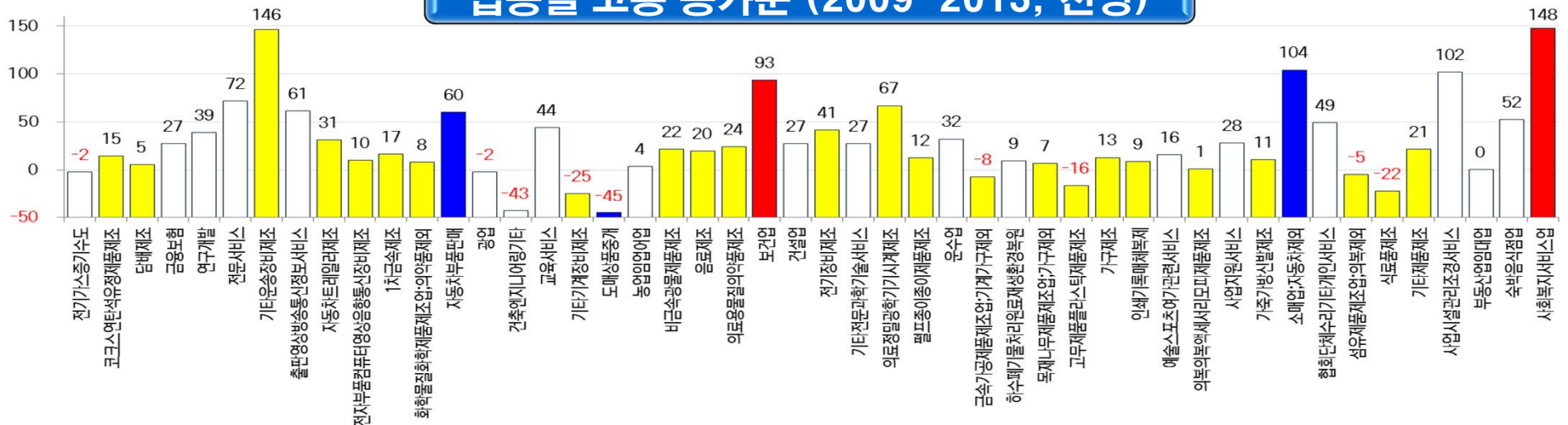
25

수주 절벽은 일감 절벽으로 이어져 인력 감축이 불가피  
현재 조선업 근로자의 상당수는 호황기에 진입한 **미숙련 노동자**

기능직 노동자수 추이 (만명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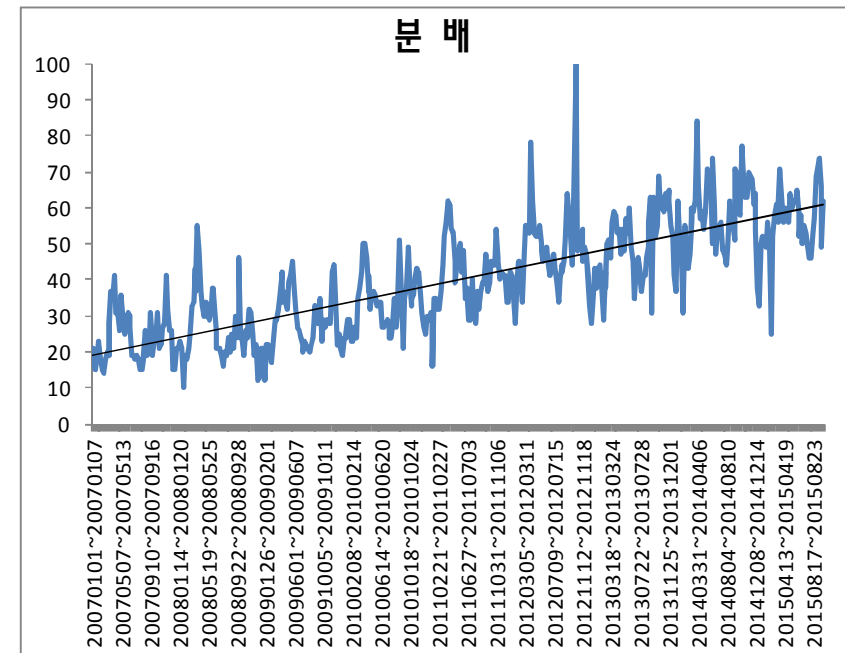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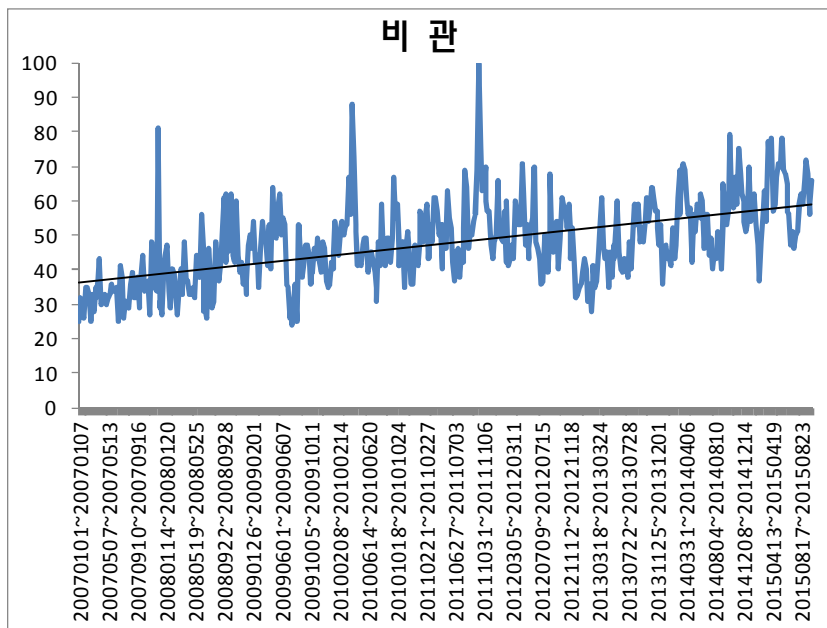
업종별 고용 증가분 (2009-2013, 천명)



## □ 사회 통합의 저하 (1/3)

**低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1) 소득분배 악화, 2) 사회 이  
동성 저하, 3) 세대간 격차 확대 등 사회통합이 저하되고 있음**

- 인터넷 포털(Naver Trend)에서 사람들이 각 시점마다 입력하는 검색어 빈도의 추세를 살펴보면, **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, 세대와 계층에 따른 갈등 증가, 형평성에 대한 요구**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갈등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. (KDI 김희삼 2015)



## □ 사회 통합의 저하 (2/3)



지난 20여년간 **사회 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** 급격히 증대

- 통계청 사회조사: 본인 세대에 비해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가?”  
“낮다” 응답비중:

1994년 4% ⇒

1999년 11% ⇒

2003년 20% ⇒

2006년 29% ⇒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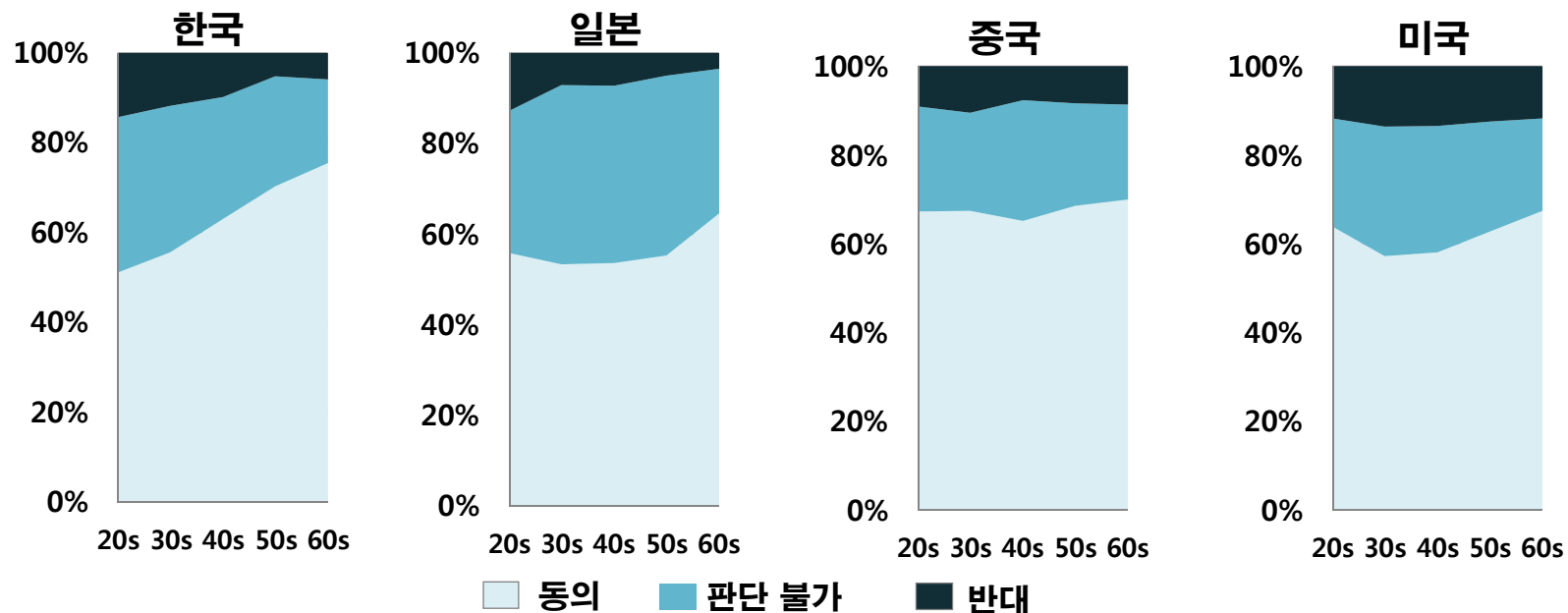
2011년 43% ⇒

2013년 **44%**

▶ 노력의 성과에 대한 젊은 층들의 회의감이 증대하며, 장년층과 상이한 가치관을 보임 (KDI 김희삼, 2014)

- “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, 노력이다”에 대한 의견에 장년층들은 70% 이상이 동의하는 반면, 젊은 층들은 50%만이 동의함.

“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은 행운이나 인맥이 아니라, 노력이다”에 대한 의견





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stylized graphic. On the left, there is a wireframe globe showing the Americas. To its right, a large, faint number '3' is visible, which serves as a background for the section header. The overall color scheme is light blue and white.

### 3. 2016년도 경제전망

## □ 2016년-2017년 경제전망 (1/2)



**한국 경제는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가 완만히 증가하겠으나, 수출부진 지속으로 인하여 2016년과 17년에 2%대 중반의 성장률을 달성할 전망**

- 민간소비는 저금리·저유가에 의한 소비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, 기대수명 연장 등 구조적 요인이 소비를 제약함에 따라 증가세가 제한적
- 설비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및 수출 부진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 가동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크게 둔화될 전망.
- 건설투자는 작년 이후 지속된 주택분양 확대의 영향으로 건축부문을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
- 수출은 세계경제가 투자를 중심으로 총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부진이 지속되고, 수입도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경기가 부진함에 따라 낮은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
- 소비자물가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고 성장세도 완만함에 따라 낮은 상승세가 지속되겠음.

# □ 2016-2017년 경제전망 (2/2)

30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15            | 2016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2017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연간 <sup>p</sup> | 1/4 <sup>p</sup> | 2/4          | 3/4          | 4/4          | 연간           | 연간           |
| 국내총생산 <sup>1)</sup><br>(계절조정 전기비) | 2.6             | 2.8<br>(0.5)     | 3.0<br>(0.7) | 2.4<br>(0.6) | 2.2<br>(0.4) | 2.6          | 2.7          |
| 민간소비 <sup>1)</sup>    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 | 2.9          | 2.4          | 1.6          | 2.2          | 2.3          |
| 설비투자 <sup>1)</sup>                | 5.3             | -4.5             | -2.4         | -3.4         | -3.1         | -3.0         | 3.3          |
| 건설투자 <sup>1)</sup>                | 3.9             | 9.6              | 7.4          | 4.2          | 1.9          | 5.3          | 2.9          |
| 상품수출(물량) <sup>1)</sup>            | 0.5             | -0.7             | -0.6         | 1.6          | 0.7          | 0.2          | 2.2          |
| 상품수입(물량) <sup>1)</sup>            | 2.0             | 0.0              | 1.3          | 1.4          | 0.6          | 0.8          | 2.5          |
| 경상수지 <sup>2)</sup>                | 1,059           | 241              | 279          | 314          | 266          | 1,103        | 1,019        |
| 소비자물가 <sup>1)</sup><br>(근원물가)     | 0.7<br>(2.2)    | 1.0<br>(1.8)     | 1.0<br>(1.7) | 1.1<br>(1.6) | 1.2<br>(1.5) | 1.1<br>(1.6) | 1.7<br>(1.6) |
| 실업률(%)<br>(계절조정)                  | 3.6             | 4.3<br>(3.8)     | 3.8<br>(3.8) | 3.6<br>(3.8) | 3.5<br>(3.7) | 3.8          | 3.7          |

1) 전년동기대비, %

2) 억달러

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blue-toned image. On the left, there is a wireframe globe showing the continents. To its right, a large satellite dish is visible, with several lines radiating from its center, suggesting signal transmission. The overall aesthetic is technological and global.

## 4.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과제:

###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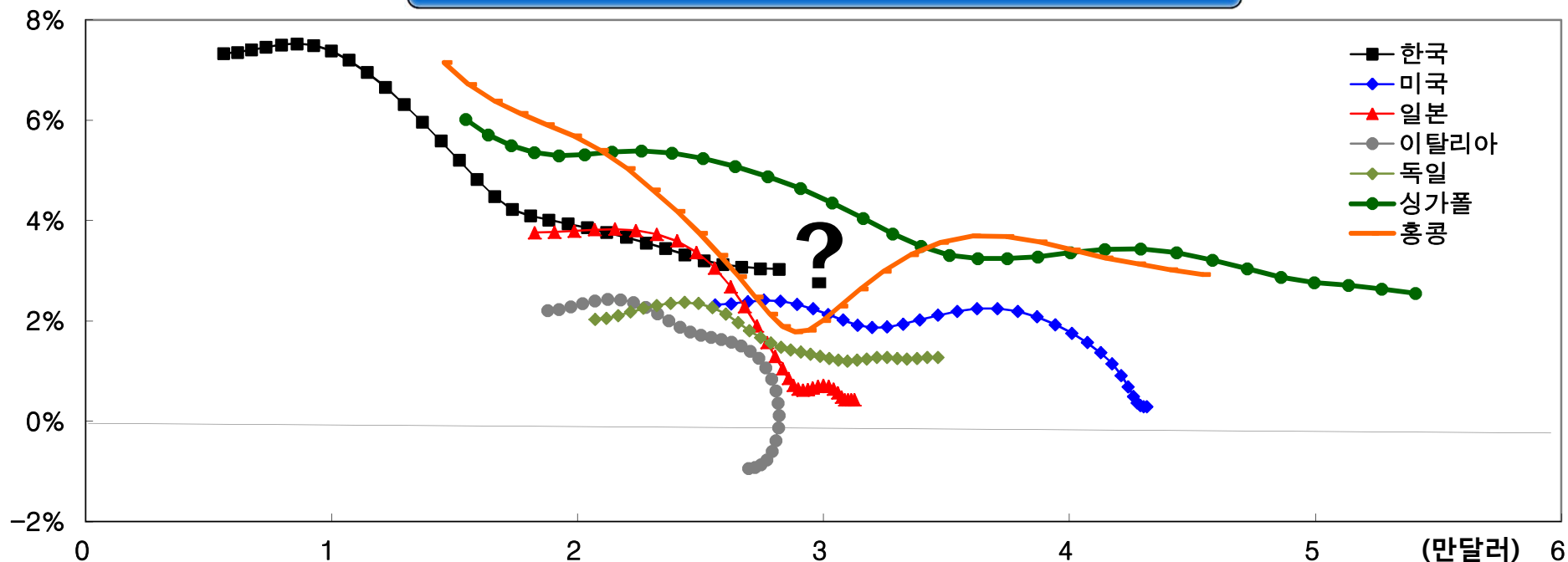
# □기로에 선 한국 경제

일본, 이탈리아 사례에서 시사하듯이, 향후 한국의 성장경로는 **혁신과 구조개혁**을 통한 성장동력 회복여부에 달려 있음

- KDI 일반대상 서베이 (주관식): **혁신**을 가로 막는 최대 걸림돌은?  
**정치** (15%), **부정부패** (11%), 대기업 (불공정행위: 5%)

\* 기득권층의 지대추구가 우리 사회의 불공정, 비효율을 초래함을 시사

1인당 소득 증가율 추이(1980-2012)



주: 2005년 구매력균등(PPP) 환율 기준, Hodrick-Prescott filter로 일인당 소득증가율 평활화 (smoothing)

# □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(1/6)



## 1.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해 역동성 강화

- 규제상태에 대한 정밀진단과 함께 규제 개혁 실천시,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은 복원 가능
- 만약 규제개혁 부재로 성장동력이 약화될 경우, 한국은 제로섬 사회가 되어 과도한 형평 요구에 매몰, **경제하려는 의지** 보다 **나누려는 의지**가 커져 성장동력이 소멸되는 악순환에 처할 우려
  - \* **Zero sum 사회**: 低성장의 경제에서는 특정인의 富의 증가가 다른 사람의 富의 손실로 귀결
  - \* **Positive sum 사회**: **경제하려는 의지**가 함양되고 성장의 과실이 선순환 궤도를 이룰 수 있음.
- ICT 발전을 기반으로 한 **공유경제**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 개선
  - \* 유희자원 (예: 남는 방을 이용한 Airbnb)을 이용하고, 노령층, 조기 은퇴자, 경력단절여성 참여 가능

### 2.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기업/산업구조조정 추진

- 구조조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만, 기업부실이 제거되고,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소득이 제고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가계부채 상환능력도 개선될 것임.
- 구조조정 **비용 최소화 원칙**하에, 잠재 손실을 파악하여 그 손실을 부실기업의 주주, 경영자, 근로자,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분담
- 고용감축으로 해고된 근로자에 대해 **轉職 및 재취업**을 원활히 유도할 수 있도록 **실업급여제도**와 **직업훈련제도**의 실효성 제고
- 조선업의 구조조정은 공급과잉 축소와 함께 꾸준한 R&D 등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한 **高부가가치화**도 병행
- 부실기업 정리 등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는 경기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, 팽창적인 통화·재정정책을 통해 적극 대응. 즉, 구조조정과 동시에 경기부양책 추진.

\* 성공사례: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미국의 구조조정과  
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

## □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(3/6)

### 3. 노동시장의 구조적 개선

- 연공서열의 경직적 임금체계 ⇒ 직무 및 성과급제로 전환
- 고착화된 취업규칙 ⇒ 임금체계 개편 등이 용이하도록 취업규칙 개정시 노사자치성 강화
- 경직적인 인력사용규제 ⇒ 기간제 제한·파견규제 완화
- 불확실한 해고절차 ⇒ 해고절차 명확화로 불필요한 비용 축소
- 노동시장 이중구조 ⇒ 정규직·비정규직 간 불합리한 격차 축소
- 유연성에 대한 두려움 ⇒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안전망 강화



# □ 성장동력 복원과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(4/6)

3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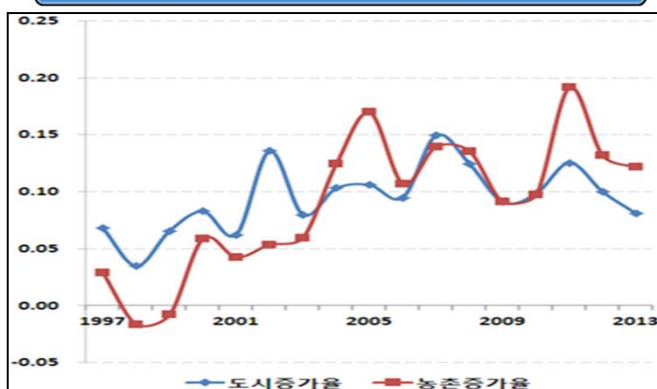
## ▶ 4. 對중국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전략 강구 (KDI 김민정, 2016)

- 브랜드 확립, 구매 후 서비스, 한류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 필요
  - \* 한국상품을 인터넷으로 구매한 중국 소비자 99%가 재구매 의향. 한국 영상물 시청빈도 2배 증가 시 한국상품의 인터넷 구매확률이 약 4%p 상승
- 정부는 전자상거래 **수출 통계 보완, 물류와 통관 간소화, 정품인증 및 구매 후 서비스에 대한 보장 시스템 지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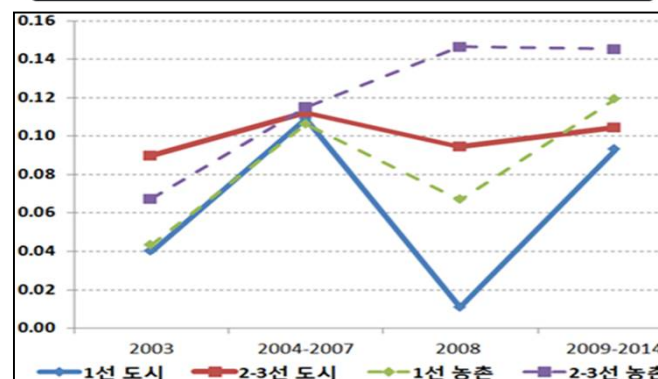
## ▶ 5. 중국 농촌 및 2선 · 3선 소비시장의 급성장 활용전략 (KDI 이진국, 2016)

- 농촌지역은 소비증가가 뚜렷한 **가전제품, 생활용품, 가공식품**을 중심으로 진출품목 확대. 도시지역은 도시민과 농민공의 수요가 혼재, 가격 · 품질면에서 **다양하고 차별화된 상품** 입점
- 정부는 **현지 한국 유통기업-국내 소비재기업-물류기업 간 수출협업체계 강화**

중국 1인당 소비증가율



지역별 1인당 소비증가율





## 6.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개선

-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목표를 ‘어려운 기업’ 을 돕는 것이 아닌, ‘성장하는 기업’ 이 직면한 **시장실패** 문제를 해소하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
  - \* 신용보증 지원 대상을 업력이 짧은 **창업기업** 위주로 집중하고, 일정기간 보증수혜기업에 대해서는 **보증졸업제** 강화
- 중소기업 지원정책 성과 지표를 정책목표에 맞추어 **생산성** 관련 지표로 전환할 필요
- 정책 성과지표에 기반한 객관적 정책평가를 상시화하고, 평가결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정책들은 보완 개선

### 7. 공동체 지향의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

- ※ 가정 교육과 학교 교육에 따라 협동, 신뢰, 배려와 관용 등 **인성**이 다르게 형성됨.
- 교사주도형 강의식 수업방식에서 **학생참여형 수업방식**으로 교육 패러다임 전환 (KDI 이주호/김부열/박운수/최승주, 2016)
  - \* 학생참여형 수업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신뢰 수준도 높음. 학생들끼리 토론/협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가 형성
  - \* 자유학기제 시범 중학교 대상으로 자유학기 중 **학생참여형 수업** (프로젝트 기반 학습) 도입 결과, 학업성취도 하락 없이, **학생간 신뢰수준이 약 8% 향상**
- 부모와의 연대감이 인성 형성에 중요한 영유아기에 가정 양육을 위한 여건을 보조하면서, 맞벌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시설보육의 질 개선 필요.
  - \* 질 낮은 어린이 집의 퇴출을 위한 ‘질 평가 연동 재정지원’ 필요
  - \*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등 일-가정 양립 저해요인 해소
    - 남성 육아 휴직 이용비율은 5.6% (2015년)에 불과